주간통일정세 2009-11(2009.03.09~03.1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11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포사격훈련 참관(3/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포병사령부 산하 제1811부대를 시찰하고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이 "포병들의 용맹스러운 훈련 모습을 보고 모든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 분쇄하고 조국을 철벽으로 지킬 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의 포병부대 시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명국 현철해 리명수 대장, 김원홍, 한동근 상장 등 북한군 지휘부와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당 중앙위 책임간부들이 수행했으며, 리정부 포병사령관이 김 위원장을 영접

○ 北, 김정일 후계자 세습 통달(3/15, 아사히 신문)

-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문제와 관련, 북한 노동당의 조직지도부가 2008년 12월 고위 당간부들에게 후계자를 세습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부 통달을 내리고 사상교육을 지시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5일 보도, 그러나 통달에는 후계자의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베이징(北京)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보도
- 통달은 각 조직의 인사와 검열권을 쥐고 있는 당조직지도부가 작년 12월 1일자로 고위 간부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후계자에 김씨 가문의 사람이 된다는 점에 대해 내부에서 사상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 고위간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짐.
- 이 소식통은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습 여부를 놓고 당과 군 내부에서 대립이 빚어지기 시작함에 따라 통달을 통해 김 위원장의 의도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
- 다른 소식통은 후계자 문제에 대해 "3명 모두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아직 백지에 가까운 상태"라면서 이번에 후계자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차남과 3남이 20대로 젊어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로 10년 후 다시 검토한다"는 판단이라고 신문은 보도

나. 정치 관련

北조평통, 南, 대화하려면 사죄부터(3/14, 조평통 서기국)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14일 이명박 정부가 "진짜 남북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접경까지 몰아간 범죄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
-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보도'를 통해 또 남측 당국이 대화를 하려면 "사죄"와 함께 "불순한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행위들을 일체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

김정일, 만포시민 수천명에 컬러TV 선물(3/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신념은 행복을 안아온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과 인접해 있는 자강도 만포시의 주민 수천명에게 일시에 컬러TV를 선물로 보냈다고 14일 보도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3월 4일 김 위원장이 만포시를 현지지도하면서 "유색금속, 타이어, 모제품생산과 사회급양봉사, 도시경영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해 높이 평가"해 "만포시안의 노동계급과 시민들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선물 종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음.
-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만포시 주민들에게 이같은 선물을 보낸 배경에 대해 만포제련소, 압록강다이야(타이어)공장, 만포방사공장, 식당인 만포각 등 만포시내를 현지지도(중앙통신 3.1일자 보도)하면서 2년전 현지지도 때 비해 몰라보게 발전한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김 위원장은 또 시찰과정에 자강도와 만포시에 대해 '올적마다 달라지는 도', '즉시 집행하는 도', '타발이 없는 도', '인민적 시책이 훌륭히 실시되고 있는 도'라고 칭찬하고 "국경지대에 살지만 모두다 우리식"이라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고 신문은 보도

北, 한반도 긴장은 반북 대결책동 탓(3/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사대매국노들의 역겨운 망동'이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현재 한반도에 "엄중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대화 거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의 산물"이라고 비난
- 신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호주 및 인도네시아 등 순방에서 대북정책의 지지를 구하며 "남북관계의 파탄과 한반도 긴장격화 책임을 북에 떠넘기려 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최근 인천의 강연회에서 통일은 주변국들의 "양해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발언한 점도 언급하며 "사대매국노들의 용납 못할 궤변"이라고

비난

- 노동신문은 이날 '이른바 북위협설은 북침을 위한 위장간판'이라는 다른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북위협설'은 한국의 "이전 독재자들이 입버릇처럼 외우던 판에 박힌 '남침위협설'의 복사판"이라며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北안주탄광 붕괴, 광부 29명 7일만에 구조(2/27, 노동신문)

- 북한의 주요 석탄생산지인 평안남도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 태향탄광에서 2월14일 탄광이 붕괴하는 바람에 광부 29명이 갇혔으나 7일 만에 모두 무사히 구출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이 신문은 '지하 막장에서 분출된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주탄광측은 광부 구출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소집, 가정주부들까지 나서 우회 갱도를 파 들어간 끝에 7일 만에 29명의 광부를 무사히 구출해 내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신문은 소개
- 신문은 이들 광부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갱도에 갇힌 채 맞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2월16일)에 '충성'을 맹세하고 석탄을 더 캐내 '강성대국'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전체 주민들에게 이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본받을 것을 촉구했으며 노동신문은 4면 거의 전면에 걸쳐 이 기사를 게재

○ 北, 아무리 떠들어도 위성 발사(3/7, 통일신보; 3/8, 우리민족끼리)

- 8일 북한의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7일자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자주적인 권리의 행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재'니 '요격'이니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에 놀랄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언급
- 이 신문은 "지금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은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려 하는 것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왜곡"고 있다고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

○ IMO, 北발사 일정·위험좌표 통보(3/13, 연합)

- 국제해사기구(IMO)는 12일 낮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광명성 2호'를 4월 4~8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한 뒤 이를 회원국들에게 알림. IMO는 '실험용 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에 관한 정보'라는 제목의 안전 항해 회람을 통해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실험용 통신위성 광명성 2호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들에게 알린다"고 발표
- IMO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발사 예정일은 4월 4~8일, 시간은 매일 오전 2~7시(세계 표준시)로 설명

○ 北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두남 사망(3/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김두남 대장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4면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된 그의 부고를 게재
- 사망한 김두남 부부장은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친동생임.
  * 그는 포병사령부 부사령관(1970.11)을 거쳐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 대회 때 당 중앙위원 겸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에 올랐고 1982년 10월 중앙당 군사부장, 1985년 4월 대장 승진과 함께 김일성 주석의 군사담당 서기(보좌관)로 자리를 옮겨 김 주석 사망(1994.7) 때까지 보좌, 김 주석 사후에는 그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관장으로 있으면서 때때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보좌 역할도 수행

○ 北외무성, 자주권 수호, 모든 조치 취할 것(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1일 한미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9~20일) 실시에 따른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가 우리를 건드리는 심히 내정간섭적인 언행들을 연발한 데 이어 이제는 남조선 괴뢰호전 세력과 야합하여 무력으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실정에서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자기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강조

○ 김격식, 좌천 아닌 야전 군단장으로 임명(3/11, 연합)

- 지난 2월 북한군 총참모장(합참의장)에서 갑자기 해임됐던 김격식(69) 대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을 관할하는 인민군 4군단장에 임명된 것으로 11일 확인, 정보 당국자는 "우리 기준에서 보면 합참의장이 야전 군단장으로 내려간 것은 강등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NLL 긴장 고조를 위해 파견된 것이라면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

○ 北대의원선거, "경축 분위기" 소개(3/8;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언론 매체를 통해 속속 투표율을 전하거나 선거구별 '경축 분위기'를 자세히 소개
-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주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했으며 조선중앙TV는 선거가 시작된 아침 9시부터 특집방송을,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대내외용 라디오방송도 각 지역의 투표장을 찾아 현지 분위기와 주민들의 인터뷰 등을 녹음 방송으로 보도

- **北외무성, 수단 대통령 체포영장은 주권 침해(3/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8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게 전쟁범죄 혐의 등을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단 인민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거(선출)된 국가수반"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전대미문의 난폭한 침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인공위성 요격하면 우리도 반격(3/9, 연합)**
  - 북한은 9일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요격에 나설 경우 북한도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 익명을 요구한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 인공위성 요격에 나서면 우리도 발사지점을 탐지해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 **조선신보, 키 리졸브, 평양점령 목적(3/9,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9일 시작된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실전적인 훈련"이라고 주장
  - 신문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키 리졸브로 말하면 평양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전시증원연습(RSOI)이 대북 선제공격이라는 비난이 일어 그 무마책으로 작년부터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엄중한 것은 이것이 '조선군의 격멸', '북 정권의 제거', '조선반도 통일여건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조선 침략전쟁 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

다. 경제 관련

- **北, 연말연초 대중 비료수입 40배 급증(3/13, 연합)**
  - 북한이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이 계속 중단될 경우에 대비, 지난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화학비료 수입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0배 정도나 늘렸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의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2만5천608t에 달한다고 지적(1년 전 같은 기간은 635t에 불과)

- **北, 유럽기업들에 零세율로 투자유치(3/11,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네덜란드에서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 사업 설명회에서 북한 관리들이 관세 등 각종 세금을 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며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북한 관리들은 또 외벽 유리 공사를 하고 있는 105층짜리 류경호텔 사진을 보여주면서 평양 한복판에 이러한 고층 쇼핑센터나 호텔을 세우고 싶다면서 이러한 관광시설에 대한 유럽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

WFP, 지원식량없어 北사무소 폐쇄 중(3/10, 미국의소리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지원용 식량을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북한내 식량 분배 감시요원의 수를 줄이고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WFP는 9일 성명에서 "지난 몇 개월간 외부 지원이 줄어들어 현재 계획된 지원사업의 15%만 수행 중"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사업을 축소해야만 한다"고 설명

北, 양식어업 기술강습 및 전시회(3/10, 연합)

-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가 3월 17,18일 '전국 해양과학 부문 기술강습 및 전시회'를 연다고 노동신문은 보도,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기술강습 및 전시회는 바닷가 양식과 어장 탐색의 정보화·현대화를 위한 기술과 경험을 보급하기 위해 열린다고 함.

라. 군사 관련

北, 동해안 해안포 진지 노출(3/13, 연합)

- 북한이 동해안 해안포의 진지를 노출하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경비정 1척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짐. 합참의 한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동해안 해안포 진지의 위장막을 걷어내고 진지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해안포 실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은 동·서해안에 사거리 20㎞에 달하는 76mm, 100㎜ 해안포를 다수 배치해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신의 길이를 늘여 사거리가 30~40km로 확장된 해안포도 전력화한 것으로 알려짐.

北, 4월 4~8일 발사 IMO에 통보(3/12, 연합)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으나 발사 시기 등 구체적인 통보 내용은 밝히지 않음.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문화유적 관리에 전 주민 동원시스템(3/15, 조선신보)

- 북한은 오랜 문화유적들을 보호·관리하는데서 전담 기관 뿐 아니라 전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대중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췄다고 조선신보가 15일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당국이 해마다 정하는 봄·가을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문화유적들의 복원·보존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며 "문화유적들을 중심으로 한 주변일대들에 대한 관리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데 여기에는 나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주민이 동원 된다"고 소개
- 북한은 또 매년 4월과 11월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족문화 유산을 잘 보존해서 근로자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교양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문화유적 애호월간'으로 지정하고 있음.

○ 北평양 궤도전차, 6월부터 운행 정상화(3/14, 조선신보)

- 북한은 현재 고려호텔 옆에 위치한 평양역에서 광복거리 끝인 만경대(송산역)까지의 궤도전차 구간에 대한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1일부터 이 구간 운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 2단계 공사의 작업구간은 광복거리입구에서 차량기지가 있는 종점인 만경대 송산역까지 10㎞로 낡은 전주를 궤도 레일과 함께 교체

○ 평양에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 개업(3/14, 조선신보)

- 평양의 광복거리에 이탈리아 현지에서 요리 연수까지 받은 요리사들이 피자와 스파게티를 비롯한 각종 파스타 솜씨를 선보이는 이탈리아 요리 전문식당이 들어서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 작년 12월 문을 연 이 식당은 북한에서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으로는 두 번째로, 앞서 2005년 7월 평양의 번화가인 창광거리 련화동에 첫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인 '별무리 차집'이 개업, 신문은 새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의 운영은 개별적인 상업 관계자의 착상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도 세계적으로 이름난 요리들을 맛보게 해야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

○ 北, 청소년에 민족자존 교육 강화해야(3/12,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2일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고 더 높이 비약하자'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면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사상교육의 강화를 강조
- 신문은 특히 "민족의 전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달려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이 "민족성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사상 진지를 허물기 위한 사상공세의 촉수를 청소년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에 대응해 "새 세대들에게 조선민족의 강한 자존심을 심어주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주문

○ **北고현숙, 빙속 국제대회 금메달(3/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여자 빙상의 고현숙이 독일에서 7~8일 열린 제3차 '도전자컵(챌린저컵)'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美국무부 관계자, 北발사체는 탄도미사일(3/14, 자유아시아방송)**

- RFA는 13일(미국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4-8일 예정돼 있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이 발사하려는 로켓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미 국무부의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요격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래의 일이고 정보 관련 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함.
-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음달 4-8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국제기구 외에 별도로 미국 정부에도 직접 알려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미 정부는 유엔의 국제기구를 통해 발사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

○ **오바마, 北 미사일 위험성 경고(3/12,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미국의 외교안보 과제를 설명하면서 "북한 미사일 계획이 주는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전언

○ **오바마, 대화를 통한 北개방 노력 계속(3/12,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 "대화를 통한 북한 개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백악관에서 처음 직접 만난 자리에서 "6자

회담을 통해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반 총장-오바마 대통령 면담 자리에 동석했던 유엔 고위 관계자가 12일 전언

나. 북·중 관계

○ 中영화 감상회 개최(3/13, 조선중앙통신)

- 중국 영화 '따뜻한 가을' 감상회가 12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보도, 감상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 비서, 박의춘 외무상 등이 참석, 중앙통신은 산서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이 영화에 대해 "중국의 어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간부들의 직권 남용과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보여줬다"고 소개

○ 원자바오, 6자회담으로 문제 풀어야(3/13, 연합)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3일 북핵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이견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야지 모순을 격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언급,
- 원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한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정세는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
- 그는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동북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을 강화하며 6자회담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

○ 北김영일, 北·中관계 강화발전 노력(3/12, 신화통신)

- 중국 방문을 앞둔 김영일 북한 총리는 12일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한층 강화,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힘. 김 총리는 이날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올해 북중 우호의 해를 맞이해 북·중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

○ 원자바오 中총리 10월 이후 방북할 듯(3/10, 연합)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0월6일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이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임.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10일 원 총리가 '북·중 우호의 해'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10월 이후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답방할 계획이라고 보도

다. 북·러 관계

○ 러 경보체계 가동, 北위성 발사 주시(3/13, 인테르팍스 통신)

- 북한이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군도 위성 발사 시 경보 시스템을 총가동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힘.
- 한편 이날 미하일 마르겔로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발사 계획의 위험성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위성 발사는 남북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북핵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번 발사에 대한 북한의 절대적 투명성을 원한다"라고 언급
-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3월 10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은 이 지역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공격적인 발언이나 어떤 행동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러, 북한, 우주조약 가입 지난 3월5일 통보(3/12, AFP 통신)

- 북한이 1967년 제정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조약에 가입한 사실을 최근 러시아 외무부에 통지했다고 AFP 통신이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12일 보도
- 러시아 외무부의 한 소식통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3월 5일 북한의 우주조약 가맹에 대한 통지와 외교문서를 받았다"고 언급

○ 러 외교차관, 北 발사 뒤 제재여부 따질 것(3/12, 연합)

-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은 12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

라. 북·일 관계

○ 日 외상, 北 미사일 일본 낙하시 요격(3/15, 연합)

-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은 15일 북한의 인공위성 명목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발사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
- 나카소네 외상은 가나자와(金澤)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인공위성이라고 하지만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인 점에는 변함이 없고, 일본으로서는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어 미국 등과 함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

○ 日 총리,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3/13, 연합)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 "인공위성이라고 말해도 명확하게 유엔 안보

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힘.

○ **조총련 간부 6명 北대의원에 피선(3/10,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인 재일동포 6명이 8일 실시된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대의원에 선출된 조총련 간부는 서만술 의장, 허종만 책임부의장, 량수정 부의장, 강추련 재일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박희덕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임.

마. 기타외교 관계

○ **유럽의회, 北에 위성발사 중단 촉구(3/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노동당의 초청으로 3월 16일부터 닷새간 방북하는 유럽의회 대표단은 북측에 위성발사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유럽의회 내 '북한통'으로 알려진 글린 포드 의원은, 유럽사회당 부대표인 크리스티안 비지닌 의원을 중심으로 자신을 포함해 대표단은 모두 5명이라며 "유럽의회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대표단이 적시에 방북하는 만큼 유럽의회의 의견을 북한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언급
- 그는 이번 방북을 통해 "유럽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특히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8년간 인도적인 지원과 경수로 건설, 소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유럽연합의 지원액은 5억 유로"라고 설명

○ **북한 주재 쿠바대사관 관계자들의 친선모임 개최(3/13, 조선중앙통신)**

-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조선민주여성동맹과 북한 주재 쿠바대사관 관계자들의 친선모임이 13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모임에는 로성실 여맹 위원장과 호세 갈레고 몬타노 쿠바 대사 등이 참석

○ **ICAO, 北에 '민항기위협' 철회 촉구(3/9, 연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9일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 기간 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북한의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 이사회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관련 발표를 철회하고 ICAO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즉시 북한에 발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발표

3. 대남정세

평불협, 북에 김치공장 세워(3/15, 연합)

- 북한 돕기 운동을 펴온 불교 단체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는 북측의 요청을 받아 올해 안에 김치공장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15일 발표
- 김치 공장은 개성이나 사리원, 평양 가운데 한 곳에 하루 생산량 10t 이상의 규모로 짓기로 했으며 공장은 150평 규모의 생산동과 100평 크기의 절임동, 150평짜리 저온창고와 30평 크기의 자재 창고 등을 설치

北, 통행차단 유지, 6명만 귀환(3/14, 연합)

-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다시 차단한지 이틀째인 14일 한국인 2명과 외국인 4명 등 6명의 귀환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통행 차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
- 이종주 통일부 홍보담당관은 "13~14일간 예정된 개성공단 방문과 귀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귀환할 예정인 인원은 어제 귀환하지 못한 인원을 포함해 총 427명이며, 오늘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총 727명"이라고 발표
- 다만 북한은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5시 2차례 걸쳐 본인 결혼, 자녀 결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우리 국민 2명과 중국인 3명과 호주인 1명 등 외국인 4명의 귀환을 허용

北, 개성공단 통행 다시 차단(3/13, 연합)

- 북한이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북 육로를 사흘 만에 다시 차단, 북한은 13일 개성공단을 왕래하려던 남측 인원의 경의선 육로 통행계획에 대한 동의 입장을 남측에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오전 중 방북하려던 개성공단 관계자 611명이 떠나지 못했고 오후 공단에서 남으로 귀환할 예정이던 250명도 발이 묶임.
- 북측 개성공단 및 출입관리당국은 동의 지연 사유를 묻는 우리 측의 거듭된 질의에 구체적 언급 없이 '기다리라'고만 답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언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미사일

日 외상 "北 미사일 일본 낙하시 요격"(3/15)

-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은 15일 북한의 인공위성 명목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발사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 나카소네 외상은 이날 가나자와(金澤)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인공위성이라고 하지만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인 점에는 변함이 없고, 일본으로서는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어 미국 등과 함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그러면서 "만약 발사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에서 확실하게 논의해 대응할 것이다"면서 "만약 발사한 미사일이 상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날아 일본에 떨어질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로서 확실한 대응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며 요격 가능성을 시사했음.

"北 폐연료봉 8천개 중 6천100개 제거"(3/15)

- 북핵 6자회담이 3개월여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2월 현재 8천개 폐연료봉 중 6천100개를 제거한 것으로 14일 파악됐음.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월 12일 발간한 '북한 핵무기(North Korea's Nuclear Weapons)'라는 제하의 보고서는 "북한 핵신고 내역 검증문제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불능화 작업이 2009년 1월에도 영변 핵시설에서 계속됐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지난 2007년 11월 영변 핵시설 불능화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11개 조치 가운데 8개가 완료됐다면서 진행 중인 핵원자로 폐연료봉 제거조치는 2월 현재 8천개의 폐연료봉 가운데 6천100개가 제거돼 보관용 수조로 옮겨졌다고 말했음. 또 미사용 연료봉 문제는 지난 1월 한국 대표단이 방문, 북한과 구매문제를 논의했지만 북한이 이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통제봉 구동장치(control rod drive mechanisms)' 제거는 폐연료봉 제거가 모두 끝나야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08년 6월 불능화 조치 진척에 비해 중유제공이 늦다며 불능화 조치 속도를 늦췄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또 북한이 불능화를 중단하고 폐연료봉 재처리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선 6~8주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지만 실제로 영변의 수조에 보관돼 있는 폐연료봉을 다시 꺼내 재처리하려면 3~4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음.

"美국무부 관계자, 北발사체는 탄도미사일"<RFA>(3/14)

-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미국시간) "북한이 발사하려는 로켓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RFA는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달 4-8일 예정돼 있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음.
-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한다"고 말했음.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다음달 4-8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국제기구 외에 별도로 미국 정부에도 직접 알려졌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미 정부는 유엔의 국제기구를 통해 발사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RFA는 전했음.

"러' 경보체계 가동 北위성 발사 주시"(3/14)

- 북한이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군도 위성 발사 시 경보 시스템을 총가동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러시아 총참모부의 한 고위 간부는 13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다음 달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동안 우리는 러시아 극동 내륙과 그 주변 섬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음.
- 익명을 요구한 그는 "미사일 발사체가 러시아 영토를 지나간다는 가정하에 조기 경보 시스템과 영공감시망을 통해 이 지역을 자세히 살필 것"이라면서 "로켓 잔해가 우리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음. 그는 "우리 임무는 적절한 기술로 북한의 로켓 발사체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한·일 6자수석, 16일 일본서 회동(3/13)

- 한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오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회동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3일 "위성락 본부장이 사이키 아키타카 국장과 회동하기 위해 15~16일 일본을 방문한다"며 "아직 정확한 비행 스케줄은 잡히지 않았지만 회동은 16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이번 회동은 위 본부장과 사이키 국장의 첫 만남으로 상견례의 자리도 되겠지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응책,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임.

- 위 본부장은 앞서 지난 9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한데 이어 12일에는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만나 북한 미사일과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함. 위 본부장은 일본을 다녀온 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중국도 방문,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위 본부장이 우다웨이 부부장과 만나면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들의 수석대표와 상견례를 마치게 됨.

원자바오 "6자회담으로 문제 풀어야"(3/13)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3일 북핵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이견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야지 모순을 격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함. 원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한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정세는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동북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을 강화하며 6자회담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오는 17일 방중하는 김영일 북한 총리와 무슨 얘기를 나눌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는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한단계 진전시키고 지역과 국제문제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대답함.
- 원 총리는 추가 경기부양책과 관련,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소문과 오해로 세계 증시가 급등락 장세를 보였다"며 "사람들이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전체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번 기회에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음. 그는 "우리는 이번 금융위기에 대비해 장기간 힘겨운 준비를 해왔으며 정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중국은 충분한 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함.
- 원 총리는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조치"라면서 "지난해 발표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중앙정부는 1조1천800억위안을 투입해 민생과 기술개조, 생태환경보호, 사회기초시설 건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세금 감면이 5천억-6천억위안에 달하며 기업 퇴직보험금 기준과 1천200만 교사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늘릴 것이며 앞으로 3년간 8천500억위안을 투입해 의료위생체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포함이 안된 것"이라고 설명함.

- 원 총리는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 "중국이 런민비(人民幣)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틀리다"면서 "우리는 런민비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도 절상이나 절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함. 그는 "2005년 7월 환율개혁 이후 런민비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21% 평가절상됐다"면서 "특히 최근 유로화나 아시아 통화들이 대폭 평가절하되면서 런민비가 실제로 평가절상돼 중국이 수출에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함.
- 원 총리는 또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자산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함. 그는 "우리는 외화보유액의 안전과 유동성, 가치보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다원화 전략도 실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외화보유액 문제와 관련해 국가이익을 유지한다는 원칙과 동시에 국제금융 전체의 안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함.

"北, 'IMO통보' 美에 별도 공지"(3/13)

- 북한이 다음달 4~8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는 내용을 미국에 별도로 알려준 것으로 전해짐. 외교 소식통은 13일 "북측이 뉴욕채널을 통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미국측은 즉시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에 이를 전파했다"면서 "한·미 간에 정보공유는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함.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해받은 것은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발표하기 직전인 12일 오전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 소식통은 정부가 이처럼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북한이 발표한지 5시간 정도 지날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 "IMO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를 공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함.

"北인권개선도 비핵화에 중요역할"(3/13)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6자회담을 넘어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도 비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옴. 웨이드 헌틀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북한의 미래와 국제협력'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혀짐.
- 헌틀리 교수는 "북한이 거의 완벽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통해 지역 안보협력을 일궈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며 공고한 동아시아 안보 공동

체 결성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또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함.

- 헌틀리 교수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심각한 인권위기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화된 21세기에 우리 모두의 도전"이라고 덧붙임. 회의 주최자인 테드 립만 주한 캐나다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악화된 남북관계와 북한에도 예외없이 몰아칠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함.

日총리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3/13)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 "인공위성이라고 말해도 명확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힘.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을 통해 확실히 항의하고 단호하게 중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미국과 영국도 같은 생각"이라며 "(발사시) 우리나라에 피해가 올 경우엔 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연대해 요격할 방침임을 재차 밝힘. 아울러 그는 "북한이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관계국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한국, 중국 등과 발사 중지를 위해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함.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발사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힘.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어떤 사태에든 대비하고 있다. 가능한 것은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요격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함.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견지에서 정부가 하나가 돼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안전보장 조약에 의거해 충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北, 동해안 해안포 진지 노출"(3/13)

- 북한이 동해안 해안포의 진지를 노출하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경비정 1척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짐. 합참의 한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동해안 해안포 진지의 위장막을 걷어내고 진지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해안포 실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북한은 동·서해안에 사거리 20㎞에 달하는 76mm, 100㎜ 해안포를 다수 배치해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신의 길이를 늘여 사거리가 30~40km로 확장된 해안포도 전력화한 것으로 알려짐.
-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동해 NLL 북쪽 해상에 경비정 1척을 보강

해 2척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함. 군당국은 북한이 '성동격서'(聲東擊西: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식으로 동해 쪽에서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 러 전문가 "北로켓발사는 ICBM 예행연습"(3/13)

-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목적 중 하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영토까지 닿을 수 있도록 개량하기 위한 것이라고 러시아 핵무기 전문가가 12일 밝힘.
- 블라디미르 드보르킨 러시아정책연구소 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 곧 운반용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이는 동시에 ICBM이 알래스카에 닿을 수 있도록 개량하기 위한 예행연습"일 수 있다고 말함. 그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일본을 자극하고 중국의 우려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함. 이어 드보르킨 고문은 이란이 1~2년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핵무기를 갖춘 이란은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는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와 제재가 통하지 않았던 이란이 핵무기를 소유하면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더욱 까다롭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이 같은 관측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

○ 柳외교 "'北발사' 안보리서 제기될것"(3/13)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를 한다면 (이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센터 창립행사에 참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밝힌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관계국 모두 북한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해 왔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또 '유엔 안보리 문제제기 외 다른 대응 조치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다른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관계국들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함.

○ ICAO, 北에 정보제공절차 준수 촉구(3/13)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3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통보한 북한에 정보제공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ICAO는 북한의 통보에 대해 답신을 보내 시카고협약에 따라 북한이 관련국과 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정보제공 내용을 항공고시보(NOTAM)에 올리는 등 정

보제공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함.

- 항공고시보는 ICAO가 관리하고 각국의 항공안전본부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 전 세계 각국의 항공 운항 관련 정보를 담고 있음. 북한은 ICAO의 회원국으로 직접 관련 정보를 항공고시보에 게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ICAO 사무국의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1시(현지시각 12일 새벽 0시)께 위성 발사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 외교 당국자의 설명임.
- 북한이 ICAO에 보낸 통보서한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 결정 사실과 시카고협약당사국으로서 동 위성의 발사 시기와 예상 위험좌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문건과 내용이 동일함. 외교 당국자는 "현재 북한이 알려온 좌표를 토대로 항공안전본부에서 위험 지역의 정확한 면적과 거리, 발사체 예상 괘적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함.

○ '北위성통보 발표' 확인까지 3~4시간(3/12)

- 북한이 12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고 발표하고서 정부가 몇 시간 동안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언제 어디로 쏘겠다'는 북측의 국제기구 통보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핵심정보임.
-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이 국제기구 통보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6자회담 참가국간 정보교류에도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정오께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관련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힘. 한 당국자는 "현지 공관을 통해 IMO와 ICAO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 왔지만 북한이 통보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함.
- 이 같은 답변은 연합뉴스가 이날 낮 12시30분께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다음 달 4~8일 사이에 동해 쪽 궤도로 발사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까지 적시해 통보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됨. 국토해양부는 이후 주영국대사관의 주재관이 IMO의 담당국장에게 유선으로 확인하고서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발표가 있은 지 3~4시간이 지난 뒤였으며 외교부가 국토부의 정보를 공유하기까지는 추가로 1~2시간이 더 걸렸던 것으로 전해짐.
- 외교부 당국자는 "영국시간으로 11일 저녁에 북한이 IMO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 같다"면서 "IMO 사무실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함.

러'외교차관 "北발사뒤 제재여부 따질것"(3/12)

-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은 12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함. 보로다브킨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한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유엔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발사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함. 그는 특히 "북한이 무엇인가를 발사한다면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이것이 미사일인지 평화적인 우주이용을 위한 것인지 평가할 것이며, 국제법 전문가들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으로 해석됨.
- 한·미·일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상관없이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밝혀옴. 보로다브킨 차관은 다만 "우리는 한·미·중·일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이날 한·러 6자 수석대표회동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동향과 관련한 대책과 북핵 6자회담 진전문제가 두루 협의된 것으로 알려짐.

美, 北 발사강행 움직임에 우려표명(3/13)

- 미국 국무부는 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도 전용되는 인공위성 발사체 발사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등 발사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계획을 철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힘.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실험용 통신위성을 4월 첫째주에 발사하려고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위성발사체'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함.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우리의 견해는 예전과 같다"면서 "우리 견해로는 북한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도발행위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에 대한 틀림없는 위반"이라고 지적함.
- 그는 또 "북한은 이런 도발행위를 하지 말고 6자회담 참가국들과 마주 앉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 및 북한이 이런 유형의 도발행위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세계 다른 이해당사국들과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함.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북한의) 이런 행위는 지역을 불안정하게 할 뿐"이라면서 "이것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안되고 (동북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도발행위이므로 북한에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힘.
- 그는 또 "이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매우 큰 우려사

항(a matter of great concern)"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이런 결정을 뒤집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미국의 대책과 관련, "이 문제와 관련해 외교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검토할 옵션들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음.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 시점이 G-20 정상회의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이 회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만 답변함.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문제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로서는 어떤 방북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다"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덧붙임.

북한, ICAO에 위성발사 계획 통보(3/13)

- 북한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위성 발사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고 ICAO 대변인이 12일 밝힘. 데니스 차그넌 대변인은 "북한 민간항공 당국 책임자로부터 이번 발사에 사용될 발사체의 비행 좌표와 날짜가 적힌 서한을 어제 접수했다"고 말함. 그는 "북한이 보낸 서한에는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발사될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고 덧붙임.

潘총장 "北 위성·미사일 발사 평화 위협"(3/13)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공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계획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반 총장은 이날 유엔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내달 4-8일 발사하겠다고 밝힌 '광명성 2호'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밝힘.
- 반 총장은 "북한이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북한에 대해 지난 2006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1718호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반 총장은 "북한이 안보리 관련 결의안을 준수하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그 합의를 완전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보리 회원국들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반 총장은 또 남북간 양자 관계에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앞서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실험용 통신위성 광명성 2호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들에게 알린다"고 밝힘.

"北 위성 발사는 관심환기용"<러' 전문가>(3/12)

-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통보한 가운데 위성 발사 배경에는 자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이 제기됨.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시티 통신사 기자 겸 국제문제 평론가로 활동 중인 이반 자하르첸코는 12일 "국제사회의 따돌림과 식량 부족도 북한의 위성 개발을 막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 배경을 4가지로 요약함.
- 그는 우선 "위성 발사는 현재 북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그의 후계 구도에 대한 소문이 난무한 상황에서 그의 건재함을 드러내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은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키워주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그는 "1998년 은하-1호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위성 개발을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우연이 아니며 오는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맞춰 엄청난 업적이 필요한데 '우주'는 그에 적합한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함.
- 그는 이어 "이번 위성 발사는 현재 중동 문제와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버락 오바마 정권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북한은 1994년 클린턴 정권 때처럼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어쩌면 미국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두고 직접 대화에 나서주길 희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강조함. 그는 또 "북한의 위성발사는 한국을 의식한 것으로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우주 기술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런 기술력이 두 나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함.
- 그는 "위성기술이 탄도 미사일 기술로 쓰일 수 있음을 알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러 "북한, 우주조약 가입 지난 5일 통보"(3/12)

- 북한이 1967년 제정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조약에 가입한 사실을 최근 러시아 외무부에 통지했다고 AFP 통신이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12일 보도함. 러시아 외무부의 한 소식통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3월 5일 북한의 우주조약 가맹에 대한 통지와 외교문서를 받았다"고 말함.
-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도 러시아 외무부 공보국이 "미국, 영국과 함께 조약의 첫 서명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북한이 '달과 기타 천체

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1967 외기권조약)'에 가입한 사실을 북한 측으로부터 통지받았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함.

- 러시아 외무부는 또 "북한은 또한 1976년 발효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에도 가입했다고 유엔에 통보했다"고 전함. 러시아는 1967년 제정된 외기권조약에 영국, 미국과 함께 서명했으며 이 조약은 우주에서의 대량파괴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있음.

中, 北 광명성2호 발사통보 예의주시(3/12)

- 중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4월 4~8일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것에 예의주시하면서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함.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광명성 2호를 4월 4~8일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IMO에 통보한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간접적인 우려와 함께 자제 희망을 전달함.
- 그는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유관 당사국들의 공통된 이익"이라고 강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11일(미국시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돼 있다"며 중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음.

北 평양서 직접 이메일로 '발사' 통보(3/12)

-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 발사 예정 사실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이메일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 북한은 특히 주영 북한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평양에서 IMO 공용 이메일로 보내 IMO측도 한동안 북한측의 통보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짐.
- IMO는 11일(현지시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12일 오전 북한대사관측과 접촉해 이메일 내용을 확인함. 북한이 보낸 이메일에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실험용 통신 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 참조하라'는 내용과 함께 파일이 첨부돼 있음. 첨부 파일에는 안전상 주의해야할 2개의 좌표가 제시돼 있는데 1곳은 동해상이고 다른 한 곳은 태평양 지역임.
- IMO는 이날 오후 북한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이메일 내용을 최종 확인한뒤 '안전 회람'을 통해 해당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예정임.

○ “北, 4월4-8일 발사 IMO에 통보”(3/12)

-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내달 4~8일 사이에 발사할 것임을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하면서 동해쪽 궤도 좌표도 알림. 연합뉴스가 12일 복수의 대북 정보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한 수시간 후 국토해양부도 “우리측에서 파견된 담당자를 통해 IMO 담당 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북한이 다음달 4~8일 동해, 태평양 각 한 좌표상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확인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런던 시간으로 11일 저녁 북한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로 IMO측에 문건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1단계 추진체는 동해에, 2단계 추진체는 태평양에 떨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사전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함.
- 북한은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평양에서 런던에 본부를 둔 IMO의 공용 이메일로 보내 IMO측도 한동안 북한측의 통보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짐. 북한의 발사관련 항행안전 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북한이 제공한 좌표들을 통해 발사체의 정확한 궤도 파악에 나서는 한편 발사시기 무렵 궤도 주변 육·해·공상의 안전조치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구분이 어려운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사계획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발사 강행시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 등 대책 협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북한이 “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으나 발사 시기 등 구체적인 통보 내용은 밝히지 않음.
- 북한의 발사 예정 시기는 북한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로 제12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김정일 3기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는 시점,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16주년(4월9일)과 맞물림.
-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를 앞두고 또 최근 우주천체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등 국제우주조약들에 새로 가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은 “러시아는 지난 5일 북한의 우주조약 가맹에 대한 통지와 외교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12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북한은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와 2006년 ‘대포동 2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때는 항공기와 선박들의 안전항행에 필요한 사전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샀었음.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확실시된 이날 오후 청와대는 정례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함. 청와대 관계자들은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결국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시험발사 자체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고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발사 계획의 중단을 촉구함.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11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든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강행할 경우 "안보리(회부)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선 아직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언급하지 않았음. 우리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달 하순께 로켓을 발사대에 세우는 등 발사 준비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현재 로켓 조립을 사실상 끝낸 것으로 알려짐. 미군은 북한이 발사할 로켓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 이지스함 9천t급의 스테덤호와 채피호를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이유로 동해상에 배치해 놓고 있음.

美 "北우주발사 유엔결의 위반"(3/12)

- 미국 국방부는 11일 북한의 우주발사는 기본적으로 미사일과 인공위성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힘.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우주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종의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접해왔다"면서 "국무부도 이미 그것이 우주발사(space launch)가 됐든 미사일 발사(missile launch)가 됐든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함.
- 그는 "이것은 두 가지(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모두에 이용될 수 있는 발사체와 관련이 있다"며 "이것은 이중적 목적의 기술이고 무엇보다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모렐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혹은 위성을 태평양을 향해 쐈을 때 미국이 이를 요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보나 작전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 대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함. 모렐 대변인은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임.

한·러, 북핵문제 긴밀 협력 합의(3/12)

- 한국과 러시아는 1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9차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 동정 등 한반도 정세와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특히 양국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방안 등 양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 방문 이래 최근 잇따른 양국 고위인사 교류와 에너지 협력 강화 등 실질협력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양국은 또 다음 정책협의회를 올해 하반기 중 편리한 시기에 모스크바에서 개최, 고위 협의채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된 문제와 북핵 6자회담 진전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하고 유명환 장관과 권종락 제1차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각각 예방함. 그는 위 본부장과 회담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유엔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발사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무엇인가를 발사한다면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이것이 미사일인지 평화적인 우주이용을 위한 것인지 평가할 것이며 국제법 전문가들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함.
- 보로다브킨 차관은 앞서 지난 7일 잠시 한국을 방문,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양측의 평가와 대응방안을 논의함.

한·러, 北미사일 등 현안 논의(3/12)

- 한국과 러시아는 1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9차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비롯한 양국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함.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는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국간 지속하는 협의 채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보로다브킨 차관의 지난 1월 방북 결과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가지고 무역을 비롯한 양자관계, 지역정세, 동북아지역정세, 여러 중요한 국제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한 협의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탄탄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함.
-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 동북아 정세,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세계금융위기를 비롯한 국제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된 문제와 북핵 6자회담 진전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하고 유명환

장관과 권종락 제1차관도 각각 예방함. 보로다브킨 차관은 앞서 지난 7일 잠시 한국을 방문,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양측의 평가와 대응방안을 논의함.

◎ 柳외교 "北미사일, 6자회담에 악영향"(3/11)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고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에서 "최근 북한이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지난 9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에서 한·미 양국의 공고한 협력을 기반으로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함.
- 유 장관은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보즈워스)특별대표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2단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3단계로 넘어가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그는 "이틀 전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한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남북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오랜 협상을 거쳐 양국의 이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좋은 협정"이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한·미 FTA는 작년 미국 대선 전에 완결됐었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미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세계무역과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현재 세계가 처한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가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유 장관은 "한·유럽연합(EU)FTA는 시기적으로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경제위기로, 즉 금융위기를 발단으로 실물경제의 침체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보호무역을 지양하고 자유무역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한·EU FTA 타결은 세계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함.

美DIA국장, 北 2차 핵실험 가능성 언급(3/11)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및 인공위성용 로켓으로 모두 이용 가능한 우주발사체 발사를 선언,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 정보관계자가 10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언급함.
-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마이클 메이플스 국장(육군 중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서면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작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뒤 핵프로그램 불능화를 재개했지만 6자회담이 좌초되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재개하거나 북한의 조건대로 대화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비난전을 강화하는 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메이플스 국장은 "이런 (북한의 반응)시나리오에는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핵실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혀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에 이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시사함.
- 최근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대남비방공세를 강화하고 우주발사체 발사 강행을 선언,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가운데 미국 관리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메이플스 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짐이나 추가 핵실험 예상 시점,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미국의 대응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이어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은 영변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으로 만든 여러 개의 핵무기를 비축해 놓고 있을 수가 있고, 적어도 과거에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을 추진했던 것 같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관련 기술을 확산시켰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강조함.
- 메이플스 국장은 또 "(잠재적인 적국들이) 지하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탄도미사일 활동을 감시하는 정보당국의 능력을 복잡하게 하고, 이 (대량파괴)무기들의 생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은 지하핵시설에서 핵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역설함. 이어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과 관련, "적국들은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적·작전적 대응조치들을 점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중국과 이란, 북한은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여러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한다"고 소개함.

보즈워스 "6자회담 조기 재개 확신"(3/10)

-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0일 "6자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힘. 중국과 일본, 한국 순방을 마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를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함.

-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의 실무그룹에서 계속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 미사일을 다루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해 북한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이 아닌 다른 협상채널을 통해 다룰 수도 있음을 시사함. 다만, 그는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어떤 일이 전개될지 기다려 봐야할 것"이라고 말함.
- 보즈워스 대표는 지난 9일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 조치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간 더 많은 대화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분명하며 북한이 이번 결정(군 통신선 차단)을 하루빨리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그는 이번 순방에 대해 "나로서는 성공적인 순방이었다"면서 "특히 한국 정부와 6자회담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함.

보즈워스 "남북소통, 비핵화 핵심"(3/9)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일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에 대해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밝힘.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의 소통 증진은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을 완화하려는 우리 노력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말함.
- 북한은 이날 시작한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빌미로 남북 육로통행을 관리하는 군 통신 채널을 끊고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왕래를 차단함.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것이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한·미는 북한이 인공위성이 됐든 장거리미사일이 됐든 로켓을 발사하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함.
- 위성락 본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대응에서 5자간 합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아직 완벽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해 이에 대한 5자의 공조 노력이 진행 중임을 시사함. 위 본부장은 6자회담에 대해서는 "우리는 검증을 포함해 어떤 협의도 진행할 용의가 있다"면서 "회담이 열릴 수만 있다면 여는 것은 유익한 일" 이라고 말해 6자회담 조기 재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보즈워스 대표도 "우리는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참가국들과 추가 협의를 할 것" 이라고 밝혀짐.
- 그는 '북·미 고위급대화가 6자회담을 약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미국은 과거에도 대체로 북한과 고위급대화에 긍정적이었다"면서 "이것이 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함. 보즈워스 대표는 또 미 행정부 북핵정책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이며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6자회담을 통해 이를 이룰 것이라고 재확인함.

러' 6자회담 수석대표 11~13일 방한(3/9)

-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이 11~13일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9일 밝힘.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로다브킨 차관은 12일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제9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 외교장관 및 제1외교차관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함.
- 위성락 신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보로다브킨 차관의 첫 공식 면담이 될 이번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된 문제와 6자회담 관련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설명. 보로다브킨 차관은 또 이용준 차관보와 제9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과 동북아 정세 등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고 외교부는 전함.

나. 미·북 관계

"北위성발사, 대북지원 위축 우려"<VOA>(3/14)

-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과거 사례들에 비춰 볼 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 이 방송은 "지난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가 실질적으로 중단됐다"며 "미국 정부는 2001년 35만t, 2002년 20만7천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2003년 대북 지원 식량을 4만200t으로 급격히 줄였다"고 말했음. 또 유럽연합(EU)의 경우, 2002년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3천500만 유로를 배정했으나 그 해 북핵 위기가 터지자 2006년까지 대북 지원을 전면 보류했으며,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한국 정부도 대북 쌀,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는 것.
- 방송은 "미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은 대부분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상황과 인도주의 지원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1990년대 이래 대북 식량 지원 흐름을 보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식량이 전달된 때는 없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식량지원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음.
- 방송은 이어 국제기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 그렇지 않아도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든 마당에 북한 당국의 군사적 위협 행동으로 인한 대북 인도지원 중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이 입게 된다며 "문제는 북한당국이 이를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음.

"北 식량난에 두루미도 떠나"<美두루미재단>(3/13)

- 북한의 식량난 여파로 북한 안변에서 겨울을 나던 국제적 멸종 위기종 철새인 두루미가 이제는 한 마리도 월동을 위해 안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미국 위스콘신주에 본부를 둔 '국제두루미재단'의 조지 아치볼드 이사장이 말함.
- 아치볼드 이사장은 13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두루미들이 원래 3월께 안변에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동했다가 11월께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곤 했지만 이제는 한 마리도 월동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만연한 식량난"을 그 이유로 들음. 그는 "북한의 안변으로 돌아오던 두루미들이 1990년 말 이후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농지에서 곡식을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가 두루미의 먹이가 하나도 남지 않지 않게 된다고 설명함. 이 때문에 두루미들이 이제는 먹이가 있는 남쪽 철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생태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아치볼드 이사장은 말함. 안변 두루미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철원 지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가 300마리에서 800마리로 늘어났다는 것.

美, 北발사체 대응은 '클린턴식' '부시식'?(3/12)

- 북한이 내달 4~8일 사이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할 경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 방향은 1998년 '광명성 1호' 때의 클린턴 방식일까, 아니면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의 부시 방식으로 나타날까 주목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을 지켜봤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방미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거론하면서도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함.
- 과거 두 차례 발사는 모두 예고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는 공통점 속에 미국의 대응 방식은 현격한 차이를 보임.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을 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추진하다 의장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는 선에서 그치고 그해 10월 뉴욕에서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가짐. 이미 1996년 4월과 1997년 6월 두 차례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가졌던 터였음.
-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미국내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11월 의회의 입법을 통해 대북 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듬해 5월 방북한 뒤 포괄적 대북 접근 방안을 내놓았음. 이를 기반으로 1999년 9월 열린 북미 미사일 회담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선언을 내놓았고 2000년에는 북한 조명록 국

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거치며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합의 직전까지 도달했었음.

- 북한은 사거리 300마일(약 500㎞) 이상 미사일의 생산과 개발, 배치를 중단하고 이미 보유한 것은 수년내에 폐기하기로 했으며 단거리 미사일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을 준수하고 MTCR 지침을 초과하는 미사일 및 관련부품과 기술의 대외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음. 반대급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매년 3개의 인공위성 발사를 지원하고 현금 보상대신 매년 10억달러의 식량 등을 수년간 지원키로 했음. 당시 북한과 '돈을 주고 사는' 직접 거래형 '빅딜'로 미사일 문제를 풀려고 했던 클린턴 방식은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으나 완전합의를 목전에 두고 클린턴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로 바뀌는 바람에 미사일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음.
- 부시 대통령은 핵문제에 대해서처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해서도 강경책을 선택했함. 북한이 2006년 미사일을 발사하기 약 1년 전인 2005년 9월 북핵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을 도출해냈지만 직후 미국이 북한의 위조 달러화 문제를 제기하며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6자회담이 표류하기 시작함. 2006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북한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파견했으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침에 따라 북한과의 접촉을 거부, 김계관 부상은 힐 차관보를 코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음. 이후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압박과 위기의 수위를 높여가다 7월 미국 독립기념일 '축포'를 쏘듯 장거리 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을 함께 발사함. 부시 행정부는 일본과 손잡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추진, 일본이 발의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킴.
- 부시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제재도 가능케 하는 '유엔헌장 7조'를 원용한 일본의 발의안을 지지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피하는 선에서 타협한 대북 결의에 찬성함. 북한은 박길연 당시 유엔주재 대사의 성명을 통해 결의가 "정치적 목적"에서 채택됐다며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그해 10월 핵실험으로 안보리 결의에 대답함으로써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북한식 대응 방식을 재확인함. 이어 부시 행정부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자 2007년 1월 힐 차관보가 베를린에서 김계관 부상과 만나 북미 양자회담을 갖도록 허용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풀기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게 됨.

클린턴 "北 미사일발사시 여러대책 있어"(3/12)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1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믿는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함. 클린턴 장

관은 이날 방미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힘.

- 그는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매우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경우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말함.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클린턴 장관은 또 양 부장과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들이 미해군 관측선을 위협한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함.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건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함.

美정보국장 "北 발사하려는 건 우주발사체"(3/11)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은 10일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로 여겨진다고 밝혀짐.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표면상 '인공위성(satellite)'이라고 말하는 발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space-launch vehicle)"라고 답함. 블레어 국장은 또 "나는, 북한이 우주발사(space launch)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믿으려 한다. 그것이 그들이 하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미 행정부 인사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블레어 국장이 처음이며, 이는 북한의 주장처럼 발사체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미 정부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됨.
- 블레어 국장은 그러나 "이 기술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과 구분이 되지 않으며, 3단계 위성발사체가 성공하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알래스카 주민들이 말하는 본토의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함. 이에 대해 에반 바이(민주·인디애나) 상원의원은 "이것은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두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드러냄.
- 블레어 국장은 이어진 답변에서, 북한은 핵무기나 무기급 핵물질을 판매하려고 하기보다는 핵기술 전파를 통해 핵확산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블레어 국장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 부품을 이란 등 중동 몇 개국에 판매하고 시리아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기술을 다시 판매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이와 함께 블레어 국장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함.

- 그는 "김 위원장은 작년 8월 몇 주에 걸쳐 대외활동을 전보다 활발하지 못하게 만든 뇌졸중을 앓았을 가능성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대외활동들은 그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됐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함. 블레어 국장은 또 "북한의 통제기구는 모든 측면에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분석함.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장비 부실과 훈련부족으로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한계 때문에 북한은 주권을 보장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북한은 2006년 7월 발사시험 실패 이후 위성발사나 ICBM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동 2호 개발을 계속해왔고, 지난 2월 광명성 2호 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은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설명함.
- 메이플스 국장은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에서 몇 개의 핵무기를 비축해뒀을 수 있으며 적어도 과거에 농축우라늄 능력을 갖추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 성공을 거뒀을 수도 있다"고 말함. 그는 이어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적은 실험을 한 상태에서 무기를 배치하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짧다"고 말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시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또 "북한은 중요 복지수요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적 자원과 원조를 군사적인 목표를 위해 계속해서 전용할 것"이라고 지적,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무기 개발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의 후계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권력 승계가 이뤄나면 단기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 1인 통치에 의해 지배돼 왔고 핵심 인사들과 파벌이 권력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평가함. 메이플스 국장 역시 블레어 국장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최근 동향과 관련 "그가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함.

◎ 北외무성 "자주권수호, 모든조치 취할것"(3/11)

- 북한 외무성은 11일 한·미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9~20일) 실시에 따른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이 답하는 형식으로 "위험천만한 이번 전쟁연습을 계기로" 미국과 남한이 "우리를 겨냥하여 불장난을 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음.

-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가 우리를 건드리는 심히 내정간섭적인 언행들을 연발한 데 이어 이제는 남조선 괴뢰호전 세력과 야합하여 무력으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실정에서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자기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강조. 그는 '심히 내정간섭적인 언행들을 연발'한 게 어떤 것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북한 후계구도 언급,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임. 북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은 처음임.
- 이에 앞서 지난 2일과 6일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이번 군사연습에 대해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새 미 행정부의 약속이 기만적인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이번 군사연습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새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
- 북한 외무성이 이번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자기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정책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전략을 위한 국제회의에 이란을 초청할 의사를 밝히고 이란도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미국과 이란이 아프나기스탄 문제를 이슈로 대화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읽힘.

"WFP, 지원식량없어 北사무소 폐쇄 중"<VOA>(3/10)

- 세계식량계획(WFP)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지원용 식량을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북한내 식량 분배 감시요원의 수를 줄이고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전함. WFP는 9일 성명에서 "지난 몇개월간 외부 지원이 줄어들어 현재 계획된 지원사업의 15%만 수행 중"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사업을 축소해야만 한다"고 밝힘.
- 현재 WFP의 대북 지원기금 목표액가운데 4.5%인 2천272만여 달러만 모금됐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어 구사요원 수를 둘러싼 북한과 이견으로 작년 9월 이후 식량 지원을 중단함. WFP 아시아사무소

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 정부의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대규모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WFP의 북한내 사업 규모는 미국 정부의 기부액과 지원식량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 미국 정부는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도, 1월말 북한에 식량을 전달한 이후 아직 8차 선적분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VOA는 전함.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1월 말 전달한 5천t을 현재 NGO들이 북한내에서 분배하고 있으나 "아직 추가로 식량을 구매하지 않았다"며 "다음 선적분에 대해 WFP및 미국의 NGO들과 협의하고 있고 북한측과도 식량 전달 의향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함.

北매체 "미국의 군사우세 무력화 능력 갖춰"(3/10)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가리켜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 도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기술적 우세'를 무맥(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현대적인 군사기술 수단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은 이날 '함부로 날뛰지 말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문제삼는 것은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이지 결코 전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다"면서 "미 호전광들이 저들의 '군사기술적 우세'를 믿고 부나비처럼 날뛰고 있지만 그 '군사기술적 우세'가 미국과 남조선을 어떻게 지켜주겠는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태들이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신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일단 전쟁이 터지면 불사신같이 싸워 반드시 이기며 나아가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겠다는 철석의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며 "우리는 자기의 군사적 힘을 믿으며 그에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은 "미 호전광들의 광란적인 핵전쟁연습 소동은 우리를 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는 길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함.

北, 키리졸브 개시이래 대내 위기감 고취(3/10)

- 북한이 한미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9일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한 데 이어 TV와 라디오 방송을 동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라면서 내부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9일 새벽 2시58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최고사령부 '보도'를 내보낸 이후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은 성명을 계속 재방송했고 북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전쟁이 나면 나도 참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반향'을 잇

따라 소개함.

- 조선중앙TV에선 지난 1월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밝힌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좌 계급장을 단 군복차림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출연해 성명을 낭독. 이 방송은 오후엔 당초 편성에 없던 '조선의 대답'이라는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이 영화는 푸에블로호 사건 등 과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싸워 이겼다는 사건들을 담은 것으로, 북한 TV에 가끔 재방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반민족적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 대외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호전광들에게는 시체와 죽음만이 차례질(차려질) 것",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그 어떤 사소한 도발이라도 한다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불벼락을 들쓰게 될 것" 등으로 위기감을 불러일으킴. 10일에도 북한 매체들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최고사령부 보도에 따른 생산 현장의 '반향'을 소개하면서 주민들이 결의를 다지고 생산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난함.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중앙방송은 10일 "괴뢰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광기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평양 만경대공작기계공장 지배인과 노동자의 의 반향을 소개.
- 한 노동자는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의 전체 노동계급은...명령만 내리시면...전쟁에 용약 뛰어들 멸적의 기세를 안고 3월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생산전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함. 보통강신발공장의 노동자들은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면서...놈들을 짓뭉개 버릴 일념 안고", "도발자들을 단호히 징벌할 멸적의 투지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 "우리 공화국을 어찌해 보려고 미쳐 날뛸수록...생산에서 적극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고 방송은 전함.

보즈워스 "北문제, 한·미협력 통해 진전"(3/9)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일 "북한 문제가 매우 힘든 임무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힘.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공관으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함.
- 유 장관은 그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선임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물을 적절한 자리에 임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오찬까지 이어진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대책과 발사를 강행했을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대북정책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짐.
- 보즈워스 대표는 오찬을 마친 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회동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잠깐 예방하고 오후 3시50분

께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남.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핵을 비롯한 다양한 대북 현안을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현 장관의 인사에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며 한미공조를 통해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답함.

- 보즈워스 대표는 30여분 간 진행된 현 장관과의 회동에서 앞서 유 장관과의 회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측이 이날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9~20일)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키로 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짐. 그는 이어 한승수 총리를 예방하고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및 만찬을 가진 뒤 10일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임.

○ 북한, 37년 연속 "최악 인권국"(3/10)

-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모두 최저 점수인 7점을 부여해 수단, 미얀마, 리비아, 소말리아, 적도 기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더불어 북한을 "가장 자유가 없는" 8개국에 포함시킴. 프리덤하우스는 이로써 각국의 인권 평점을 매기기 시작한 1973년부터 올해까지 연속해 북한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음.
-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통계에 따르면 37년 동안 북한의 두 부문 평점은 줄곧 최저점인 7점이었음. 올해 보고서는 북한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당 체제"라고 소개하고 북한 정권이 정치적 변화를 거부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며 인권 운동가를 처벌하는 동시에 어떤 형태의 독립적인 사법기관도 없다고 지적함. 북한을 비롯한 8개국에서는 시민의 생활이 폭넓게 통제받고 있으며 독자적인 생각과 행동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상화돼 있다고도 함. 보고서는 193개국을 정치,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 '자유국가'(89개국), 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적 자유국가'(62개국),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부자유 국가'(42개국)로 분류함.
- 한국은 2005~08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에서 최고점인 1점, 시민 자유에서 2점을 받아 '자유국가'로 평가함. 한국은 1973년부터 1988년까지 평점 4~6점을 받아 '부자유국' 또는 '부분적 자유국'으로 지목됐으며 이후 상위 점수인 1~3점을 받아 '자유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 자유 부문에서 1점을 기록한 적은 없었음.
- 올해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그루지야와 최근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코소보를 '부분적 자유국가'로 지목함. 또 팔레스타인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과 경제 봉쇄 등으로 자유가 더욱 제약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 중국은 정치적 권리 7점과 시민 자유 6점으로 '부자유국'에, 일본은 각

각 1점과 2점으로 '자유국'에 이름을 올림.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사회 불안과 정부 부패로 시민의 자유가 지난해 5점에서 6점으로 악화돼 '부분적 자유국'에서 '부자유국'으로 떨어졌으며, 이라크는 지난해와 같이 평점 6점을 기록했지만 치안이 개선되고 정치적 참여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인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美국무부 "'키 리졸브' 北에 위협안돼"(3/10)

- 미국 국무부는 9일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를 빌미로 공격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협은 미사일을 과거에 발사했고, 발사하려는 북한"이라고 밝혀짐.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등의) 행동은 비단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우드 부대변인은 또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레토릭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도발적이기까지 하다"며 "우리는 역내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뿐인 이런 레토릭과 행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또 우드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을 6자회담의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자 한다"면서 "도발적인 행동은 역내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함. 이어 우드 부대변인은 9일 미국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힘.

北 "인공위성 요격하면 우리도 반격"(3/9)

- 북한은 9일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요격에 나설 경우 북한도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
- 익명을 요구한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 인공위성 요격에 나서면 우리도 발사지점을 탐지해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함. 그는 "미국이 요격을 시도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준비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우주는 전 인류의 재산"이라며 "조선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들의 풍족한 물질생활을 위해 우주자원 이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함.
- 키팅 사령관은 미군은 구축함, 이지스 순양함, 레이더, 우주공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등 최소한 5가지 다른 시스템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도 지난 3일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일본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요격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함. 일본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우선 해상 이지스함에 탑재된 미사일로

요격하고 만약 실패할 경우 지상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이 추가 요격에 나서는 방식임.

다. 중·북 관계

○ 北 김영일 "北·中관계 강화발전 노력"(3/13)

- 중국 방문을 앞둔 김영일 북한 총리는 12일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한층 강화,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힘. 김 총리는 이날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올해 북·중 우호의 해를 맞이해 북·중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함.
- 그는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고 중국을 (첫) 공식방문하게 돼 기쁘다"면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가 열려 업무가 폭주한 가운데 국가 지도자와 관련부서 수장들이 개막식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말함.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우호의 해로 지정했다며 "양자관계 역사 속에서 처음 맞이하는 우호의 해이며 한 해 동안 정치와 경제,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함.
- 이러한 활동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키워온 북·중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세대를 뛰어넘어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세계에 양자 관계를 과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김 총리는 하나로 뭉친 중국인들이 지난해 폭설과 대지진으로 말미암은 시련을 극복하고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치하함.
- 또 북·중 우호의 해 기간 양국 간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 관계를 진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김 총리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7~21일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

○ 中 "김영일 北총리 17~21일 방중" 발표(3/10)

- 중국은 김영일 북한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7~21일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 10일 발표함.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영일 총리가 중국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밝히고 "방문 기간에 중국 지도자들과 회견 및 회담을 갖고 북중 문제와 공동으로 관심이 있는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함.
- 김 총리는 베이징에서 이 기간 열리는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는 한편 원자바오 총리와 양국 총리 회담을 갖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구체적인 방중 시기와 목적 등은 밝히지 않은 채 10일 김영일 총리가 원자바오 총리의 초청으로 중국을 친선방문한다고 보도.

- 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지도자들의 북한 답방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 지도자급에서 연내 답방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함.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은 10일 원 총리가 '북·중 우호의 해'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10월 이후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답방할 계획이라고 말함.

라. 일·북 관계

○ 日 아키타현, 北 발사대비 위기관리부 설치

- 일본 중서부에 있는 아키타(秋田)현은 13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신고한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계획에 로켓이 현 내의 해상에 낙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위기관리연락부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섬.
- 이날 오후 현청에서 열린 연락부 회의에서 사사키 마코토(佐佐木誠) 연락부장은 "로켓이 아키타현 앞바다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급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함.
- 연락부는 현청 각 부와 교육청, 아키타현 경찰 담당자로 구성됨. 또 이날 아키타현 인근의 니가타(新潟)현도 각부 과장들로 구성된 '북한 비상체(飛翔體) 정보 연락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섬.
- 앞서 국토교통성은 13일 발표한 항공정보를 통해 로켓 낙하 우려가 있다고 북한측이 지정한 아키타(秋田)현 해상 130~380㎞ 지점의 동해 상과 일본 열도 동남쪽 2천150㎞ 지점부터 800㎞까지의 태평양 상을 대상으로 내달 4~8일 각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특단의 주의'를 하라고 밝힘. 해상보안청도 지난 12일 선박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와 지역을 상대로 항해 경보를 내려짐.

○ 日, 대북제재 재연장 방침(3/12)

- 일본 정부는 다음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 독자적인 대(對)북한 제재조치를 다시 6개월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핵 문제와 자국인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어 계속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발동된 뒤 5번째로 연장하게 됨.
-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 발사됐을 경우의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일본은 현재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상품의 수입도 금하고 있음. 또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간에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전면 중단돼 있음.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와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 낙하됐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공해상에 떨어진 경우에도 여론이나 관계 각국의 반응을 주시하며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밝힘.

○ 김현희 "KAL기 사건은 북한의 테러"(3/11)

-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47) 씨는 11일 "KAL기 사건은 북한이 한 테러고, 저는 가짜가 아니다"라면서 "일부 유가족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2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아직도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함.
- 김현희 씨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 가족을 면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KAL기 폭파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함.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와 국가정보원이 본인을 가만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함.
- 다구치 씨에 대해 김 씨는 "제가 8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초대소에서 생활하며 들은 것은 '다구치 씨를 어디로 데려갔는데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생각했고, 86년에 결혼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힘. 김 씨는 북한에 의한 또 다른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와 관련, "저의 공작원 동지인 김숙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쳤고, 87년에 남조선 사람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메구미 씨가 사망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 그는 납치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계속 노력하면 북한은 죽은 사람이 살아 있기도 하니까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만큼 최소한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함.

○ 日 "北미사일 발사확인시 안보리 소집 요청"(3/11)

-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10일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 (미사일) 발사가 확인되는 단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1일 보도함. 그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은 직접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안보리에 긴급히 행동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함.
- 일본은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만큼 긴급회의를 요청하

면 1, 2일 이내에 개최된다고 통신은 전함. 이어 다카스 대사는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성이라고 해도 미사일 개발과 같은 기술이 필요한 만큼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 아울러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임.

-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로켓이든 무엇이든, 일본 상공으로 갑자기 날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으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 日, 대북제재 재연장 방침(3/11)

- 일본 정부는 다음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 독자적인 대(對)북한 제재조치를 다시 6개월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핵 문제와 자국인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어 계속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발동된 뒤 5번째로 연장하게 됨.
-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 발사됐을 경우의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일본은 현재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상품의 수입도 금하고 있음. 또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간에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전면 중단돼 있음.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와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 낙하됐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공해상에 떨어진 경우에도 여론이나 관계 각국의 반응을 주시하며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밝힘. 구체적인 조치로는 2006년 유엔제재 결의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사치품 등의 수출 금지와 금융제재 조치의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내 북한의 대표부 격인 조총련 등 북한 관련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김현희, 日 납치피해자 가족과 11일 면담"(3/9)

-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47)씨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 가족과의 면담이 오는 11일 부산에서 이뤄진다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이 9일 발표. 나카소네 외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구치씨의 장남인 이즈카 고이치로(飯塚耕一郎·32)씨, 오빠인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이즈카 시게오

(飯塚繁雄·70)씨가 11일 오전 11시께 김씨와 면담할 것이라고 밝힘.

- 다구치씨는 북한에 납치돼 김현희씨와 함께 살면서 일본어를 가르친 이은혜라는 인물이라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음. 면담에는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도 동석.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와 다구치씨 가족들은 면담이 끝난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할 방침이라고 밝힘.
- 나카소네 외상은 "면담이 실현돼 정말 다행이다. 면담에서 많은 결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함. 면담 성사는 이날 오전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 정부 관계자도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원을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면담 주선 역할을 했다"고 말함. 일본 정부는 면담을 통해 김현희씨로부터 다구치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뒤 북한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짐.
- 북한은 지금까지 다구치씨가 1968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유골은 호우로 유실됐다고 설명해옴. 김현희씨는 지난 1월 NHK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구치씨의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다구치씨의 가족도 이를 수용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면담 성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 옴.

마. 기타

○ 北 가입한 '우주조약' 무엇인가(3/12)

- 북한이 로켓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하나로 우주와 관련된 조약에 가입하고 국제기구들에 관련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이 가입한 이들 조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이 최근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외기권조약)'과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보도했고 외교통상부도 이 사실을 확인함. 1967년에 채택된 외기권조약은 우주에서 국가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우주법과 관련한 기본조약으로 우주 이용에 대한 가입국의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외기권조약은 제11조에서 '당사국은 외기권 활동의 성질,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뿐만 아니라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통보하는데 동의한다(agree to)'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약을 구체화한 것이 1975년 채택된 우주물체등록협약임.
- 우주물체등록협약은 제4조에서 '발사국, 발사일시, 발사지역, 발사위치, 기본 궤도 요소(노들주기, 괘도 경사각, 원지점, 근지점),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shall)'고 규정하고 있음. 즉, 북한은 이 2개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긴 것임. 그러나 두 조약 모두 정보 제공 시기와 관련해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to the greatest extent feasible and practicable)' 또는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성 발사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음.

- 외교부 관계자는 "실제 국가들의 관행을 보면 보통 인공위성을 발사하고서 한참이 지난 사후에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라 유엔사무총장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함. 또한 이들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 전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면서 이들 조약에 가입한 것은 발사하려는 로켓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임을 강조, 국제사회의 비난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음.
-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 관련 조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어느 국가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우주 관련 조약)가입서 기탁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발사행위를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고 말함.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이(외기권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가입) 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거나 통보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고 말해,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됐음을 시사함.

北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두남 사망(3/12)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김두남 대장이 사망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김 대장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그의 빈소에 화환을 보냈다고 통신은 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4면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된 그의 부고를 게재함. 사망한 김두남 부부장은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친동생임. 그는 포병사령부 부사령관(1970.11)을 거쳐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 대회 때 당 중앙위원 겸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에 올랐고 1982년 10월 중앙당 군사부장, 1985년 4월 대장 승진과 함께 김일성 주석의 군사담당 서기(보좌관)로 자리를 옮겨 김 주석 사망(1994.7) 때까지 그를 보좌함.
- 김 주석 사후에는 그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관장으로 있으면서 때때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보좌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99년부터는 인민무력부 부부장직도 겸했으나, 지

난 2006년 9월 북한 정권 5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한 후엔 공개활동 보도가 없음.

- 그는 2003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에 선출됐으나 이번 제12기 때는 빠졌다.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무력부는 지난 2월 김영춘 차수가 부장이 되면서 부장이던 김일철 차수는 제1부부장이 됐고, 부부장에는 정창렬 대장, 박재경 대장, 리태일 상장(남한의 중장), 김상익 상장, 손삼술 중장(남한의 소장) 등이 있음.

○ 리비아 美에 불만..北 -이란에도 악영향(3/12)

- 5년전 대량파괴무기(WMD)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과 관계개선 약속을 받아낸 리비아가 최근 미국의 약속 불이행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함. 이는 단순히 미-리비아간 문제가 아니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이 핵개발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북한, 이란 등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 미국은 1981년 리비아가 핵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 테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제제재 조치를 내리고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가 2003년 리비아가 WMD 포기를 선언하고 팬암기 폭파 사건의 유족들에 대한 배상에 합의하자 2004년 6월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석 달 뒤에는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함. 또한 민간 차원의 핵 기술 협력과 일부 재래식 무기 시스템 판매를 합의했고, 기존의 화학무기 폐기 등을 위한 지원 등도 다짐했었음.
- 그러나 최근 유엔주재 대사로 임명된 압델라흐만 샤이감 전 리비아 외무장관은 “우리는 장비들을 내주었고, 뇌관을 제거했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아무 것도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함. 그는 이어 “북한과 이란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리비아가 WMD를 포기했지만, 관계개선만 이뤄졌을 뿐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자신들의 지렛대를 포기하겠느냐는 것임. 특히 리비아는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리비아를 혹독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익명을 요구한 한 리비아 관리는 “그들이(미국) 우리의 적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우방이라고 하면서 리비아의 인권 상황을 공격하는데 16쪽을 할애했다”고 비난함.
- 이 같은 리비아측의 공개적 불만 표출은 갖 출범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리비아의 국가원수인 카다피가 워낙 예상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신문은 분석함.
- NYT는 최근 몇달동안 리비아가 스위스와의 관계를 사실상 단절하고 있는 예를 그 근거로 들음. 카다피 아들 부부가 스위스를 방문한

동안 두명의 가정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그 직후 리비아는 스위스 은행에서 수백만 달러를 즉각 인출한 뒤, 모든 스위스 기업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고, 스위스에 대한 석유 판매를 금지했으며, 스위스 문화원을 폐쇄함. 또 리비아 항구에 정박해 있던 스위스 선박의 발을 묶고 해당 경찰의 징계를 스위스 정부에 요구함. 스위스 측이 지난달 말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을 제의했지만 리비아는 거부함. NYT는 "리비아 지도자의 개인적 이해나 적대감에 의해 국가의 기본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함.

○ 러' 전문가들 남북 긴장상황 우려(3/11)

-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 긴장 상황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해 눈길을 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제빈 한국문제 연구센터 소장은 11일 일간 네자비시마야와 인터뷰에서 "전에도 그랬듯이 북한의 긴장 유발 때문에 여러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대규모 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힘.
- 북한에 다년간 체류하는 등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제빈 소장은 "매년 이 시기에 한·미 '키 리졸브' 합동 훈련이 있었고 따라서 현재 긴장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 훈련에 대해 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현대적 경고 수단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함. 그는 "북한은 현대식 무기도 없고 아무도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충돌 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 그러면서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 부시 정권과 같은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강조함. 또 그는 "북한의 정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일부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평가들이 성급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함.
- 게오르기 쿠나드제 전 주한 러시아 대사 역시 전날 일간 코메르산트 국제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기에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함.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값어치를 높이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키 리졸브' 합동 훈련에 대응해 전투태세를 취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지금이 북한에 대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 보여줄 때"라고 말함.
- 한편, 러시아 외무부도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차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긴장감 고조를 두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은 이 지역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공격적인 발언이나 어떤 행동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평양, 외국인 사업.관광객들로 북적(3/11)

-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주

로 투숙하는 평양 보통강호텔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들로 북적거리는 것으로 알려짐. 남북합영의 평화자동차 관계자는 11일 "보통강 호텔이 지난해 미국, 중국, 아랍, 유럽 사람들로 넘쳐나 수백만달러 규모의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한달전 민간인 신분으로 미국인 전문가들과 방북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 호텔에 묵었다"고 말함.

- 특히 지난해 북한 이동통신과 류경호텔에 투자한 "이집트 오라스콤 사람들만 30명이나 현재 보통강 호텔에 장기투숙하면서 8층은 숙소로 7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어" 이들 덕분에 생선회 같은 식자재가 순식간에 동날 정도라는 것.
- 그는 보통강호텔이 평화자동차와 같이 '통일교' 평화그룹에 속해 있어 자신이 이 호텔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힘. 그에 따르면 작년 호텔에 설치한 북한 유일의 스크린 골프장에선 영국 대동신용은행 총재 등을 비롯한 외국인 장기 투숙객들이 업무후 한두시간씩 골프 연습을 하기도 함.
- 지난달 말 방북하고 돌아온 등대복지회의 신영순 이사도 "평양 호텔과 비행장 등이 외국인 방문객들로 붐벼 함께 방북중이던 호주와 뉴질랜드 교포들이 일정을 앞당겨 출국하려다 못할 정도였다"고 말함. 다만 "이번주 시작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 외국인 비즈니스 관계자는 이에 상관없이 예정대로 투숙하지만 관광객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평화자동차 관계자는 설명함.
- 지난 4일 평양에서 돌아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관계자도 "양각도 호텔에 묵었는데 북한에 선거도 있고 미사일 발사 문제도 있어서인지 지난해 7월 갔을 때보다 외국인이 많지는 않아 보였다"고 전함.
- 그는 "소년학생궁전 공연도 이전에는 수십명 정도 외국인이 같이 관람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연장이 '리모델링'중이어서 공연도 소회의실 같은 작은 방에서 했고 외국인도 서너명 밖에 못 봤다"고 말함. 평화자동차 관계자는 한편 "남한이 북한에 투자하지 않으니 평양에 달러가 없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오라스콤의 대북 투자 이후 연쇄효과로 평양에 달러가 넘쳐나는 것 같다"고 말함.
- 그 덕분에 1,2월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판매가 160대로 예년 대비 5배나 증가했고 작년 전체 판매도 652대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는 것. 그는 북한에서 평화자동차의 판매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수입차들과 달리 1년간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고 부품 공급도 잘 되며, 직영 주유소도 남포와 평양 시내에 있는 데다 평양 광복거리에 판매 전시장도 있는 등 평양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점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함.
- 그는 북한 당국도 "공화국 자동차산업 발전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장려"해 주고 있다며 "1만달러에 달하는 평화자동차 승용차의 주요

고객은 외교관을 비롯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기업소 사장, 무역회사 사장, 당 간부들"이라고 말함. 지난 2월28일부터 3월4일까지 평양을 다녀온 안동대마방직의 김정태 회장 역시 "평화자동차의 생산이 부쩍 늘었다"며 "평양 상류층에 자금이 많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다"고 평화자동차 관계자의 말을 뒷받침함.

- 등대복지회의 신영순 이사는 "평양에서 한국 차를 이전 만큼 많이 보지 못했는데,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남한차 가운데 12인승 미만은 다 지방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말하고 북한 당국의 이런 조치 배경엔 "평화자동차 내수를 늘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해 북한 당국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엿보게 함.
- 한편 안동대마방직의 김정태 회장은 "한 북한회사 관계자로부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후 북한 기업들이 당국에 연간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어 경영에 좀 부담스럽다는 투의 말을 들었다"며 우리 기업으로 치면 재산세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료가 북한 업체에 경영부담이 되는 새로운 현상도 전함. 김 회장은 또 평양에선 '수송대'라는 이름의 영업용 택시가 주로 남측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과거엔 남측 기업인들에게 북측에서 무료로 차를 제공해줬는데 이제는 차를 하루동안 쓰면 대체로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함.
- 북한이 평양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이집트 오라스콤의 투자를 받아 공사를 재개한 류경호텔의 외벽 유리 붙이기 작업이 전면부는 거의 끝나감에 따라 "이제는 노을이라도 지면 번쩍번쩍 빛나는 게 마치 서울의 63빌딩 같다"고 한 대북 사업 관계자는 전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에서 걸어서 15-20분거리에 있는 류경호텔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을 때는 평양의 흉물이었지만 "외벽을 유리로만 치장해놓아도 평양시민들이 '장군님 덕'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강성대국 전시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는 말함.

"北, 유럽기업들에 零세율로 투자유치"<RFA>(3/11)

- 최근 네덜란드에서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 사업 설명회에서 북한 관리들이 관세 등 각종 세금을 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며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일 네덜란드의 헤이그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서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관 관리들은 참석한 40여개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무역과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이 유럽 기업들에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 좋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무역 관세를 비롯한 영업세, 수익세 등의 세금을 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회 주최측은 밝힘.
- 북한 관리들은 또 외벽 유리 공사를 하고 있는 105층짜리 류경호텔 사진을 보여주면서 평양 한복판에 이러한 고층 쇼핑센터나 호텔을 세우고 싶다면서 이러한 관광시설에 대한 유럽 기업의 적극적인 투

자를 요청. 네덜란드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유럽 기업측은 북한 관리들의 설명을 들은 뒤 관세와 사업 조건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지만 북한 관리들은 외교관이기 때문인지 더 자세한 자료와 통계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오는 5월 유럽 기업들로 구성된 대북 사업단을 이끌고 방북할 때 외국인 투자를 기대하는 북한 기업과 사업 분야, 투자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이나 대북 사업 요령과 실제 사례 등을 담은 사업 참고서의 제작 등을 북한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치아 대표는 말함.

"북한,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3/10)

- 게오르기 쿠나드제 전 주한 러시아 대사는 10일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기에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밝힘. 쿠나드제 전 대사는 이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국제면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를 떠나 북한은 현재 수많은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에게 엄청난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면서 "이들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소문과 정보에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입증된 북한의 테러 행위, 공격적인 수사(修辭),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막강한 군사력, 열악한 경제환경 등이 이런 궁금증을 더 증폭시킨다"라고 지적. 1994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쿠나드제 전 대사는 "북한 지도자들은 위선적이며 때론 잔인하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할지는 몰라도 전쟁은 절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특히 그는 "자신들의 값어치를 높이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한·미 '키 리졸브' 합동 훈련에 대응해 전투태세를 취하는 것이다."라면서 "미국은 지금이 북한에 대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 보여줄 때"라고 말함. 그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면서 "그들이 발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와 함께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운은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며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이는 북한의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일시적으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고 지적함. 그는 "이런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선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임.

북한 외교관들, 스위스 연방제 집중연구(3/10)

- 북한 외교관 3명이 스위스의 연방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열흘간 스

위스를 방문함. 이번 방문은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집행하는 연방기구인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것임. 이들 북한 외교관은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의 연방연구소에서 나흘을 보낸 뒤, 스위스의 다양한 칸톤(州)들을 둘러보면서 현지 정부 관리 및 의회 의원들과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이 9일 전함.

- 프리부르 대학 연방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니콜라스 슈미트는 "그들은 스위스 연방제도의 복잡함에 놀란 게 분명하다"면서 "스위스 연방제도에서는 모든 것이 분권화되어 있지만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함. 그는 "그들은 스위스 시스템이 그 자체로 북한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두 나라의 배경이 매우 다르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몇몇 아이디어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이와 관련, 슈미트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고려연방제를 통해 남북을 통일하는 방안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함. 또한 발레 칸톤의 크리스티앙 바론 경찰청장은 "북한 외교관들은 아주 세부적인 조직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질문을 했다"면서 칸톤 레벨에서 이뤄지는 스위스 경찰시스템의 분권화가 그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힘.
- 사실상 비밀리에 이뤄진 북한 외교관들의 이번 스위스 방문에 대해 게오르그 파라고 SDC 대변인은 "변화는 서서히 이뤄지지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에 SDC는 농업 연구, 비즈니스 추세, 국제관계 등에서 북한 대표단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함.

"北, 김정운 4월부터 후계자 수업개시"(3/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다음달 초 열리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기점으로 셋째 아들 정운(26)에게 후계자 수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짐.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9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당과 군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달 초 김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조직개편안을 승인하는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을 구성하고 주요 대내외 정책 목표를 공표할 예정임.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후계자로 내정한 정운에게 주요 직책을 부여할 것"이라며 "정운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함. 그는 또 "김 위원장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이자, 자신의 70회 생일이며 강성대국의 문을 열게 되는 오는 2012년 3남 정운을 북한의 혁명 전통을 잇는 후계자로 공식 지명할 것"이라고 말함.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정운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명

으로 당선돼 다음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김정운의 생일인 지난 1월 8일 김정운을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내부 통달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짐.

○ **"北, 유럽 기계류 시장 본격 개척"<조선신보>(3/9)**

- 북한에서 기계부문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조선기계무역총회사가 올해 유럽시장 개척에 본격 나선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9일 전함.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 회사의 김혁철(44) 사장은 2012년까지 기계 수출에서 최고 실적을 돌파할 목표를 세웠으며, 올해 수출 규모는 지난해의 13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함.
- 1958년 설립된 조선기계무역총회사는 사회주의 시장이 존재하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렸지만 사회주의 시장 붕괴와 국제사회의 경제 봉쇄로 인해 지난 10년동안 어려움을 겪음. 북한에서 기계부문의 대외거래는 국가무역의 테두리 안에서 생산단위가 직접 진행하며, 조선기계무역총회사는 구성공작기계무역회사, 락원기계무역회사, 희천공작기계무역회사, 승리자동차기계무역회사 등 북한 전역에 있는 공장 자회사들의 모회사라고 조선신보는 설명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클린턴, 방한때 李대통령 접견후 극찬"(3/12)**

- 지난달 방한했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귀국 직후 우리 외교당국에 이명박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11일 뒤늦게 알려짐.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클린턴 장관의 방한에 수행했던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최근 우리 외교라인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클린턴 장관의 방한 소감과 함께 감사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말함.
- 베이더 보좌관은 통화에서 "클린턴 장관이 당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순방했는데 4개국 정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소회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국내외 상황을 보는 혜안과 뛰어난 기억력이 놀랐다고 여러차례 극찬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짐. 그는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을 비롯한 미국측 방한단이 한국 정부의 정상급 예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관계의 미래가 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짐. 특히 클린턴 장관은 방한 직후 수행원들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우정을 소개하기도 했다는 후문임. 부시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 대통령은 나의 좋은 친구이니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는 것.

- 청와대 참모는 "이 대통령이 기업 CEO(최고경영자),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외국 인사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힌 것이 정상외교 등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클린턴 장관도 첫 만남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오바마, 한미FTA 비준해야"(3/10)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추가약속을 얻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의회에 제출, 의회 찬반투표에 부치도록 해야 한다고 샬린 바셰프스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일 밝힘.
-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USTR 대표를 지낸 바셰프스키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실은 기고문에서 "미국은 계류중인 한미FTA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인 아시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언함.
- 바셰프시키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자유화하겠다는 추가 약속을 얻으면 협정에 우표를 붙여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의회 찬반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말함. 바셰프시키는 "미국의 우방이고, 아시아 3대 경제국인 한국(과의 FTA)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 앞서 론 커크 USTR 지명자는 9일 상원 재무위 인사청문회에서 "현 상태로는 한미 FTA를 수용할 수 없다"며 추가조치가 있어야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지만 미국이 희망하는 추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에 의거해 체결된 한미 FTA는 미국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첨부해 비준동의를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는 90일 이내에 찬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내용수정은 원칙적으로 안됨.
- 한편, 바셰프스키 전 대표는 이날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의회연설에서 제안했던것처럼, 미국은 경제위기동안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보즈워스, 귀국길에 DJ와 통화(3/10)

- 일주일간의 동북아 순방일정을 마치고 10일 워싱턴으로 돌아간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귀국길에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전화로 '깜짝 인사'를 나눔. 이번 통화는 보즈워스 대표의 요청으로 출국 직전 공항에서 15분간 이뤄짐.

- 보즈워스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재임시절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으며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방미 기간 보즈워스 대표가 학장을 맡은 터프스대 플레처스쿨에서 특강을 하는 등 두 사람은 각별한 친분을 갖고 있음.
-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책을 맡은 것을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보즈워스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북한 상황이 어려운데 한국 뿐 아니라 6자 회담 당사국들의 공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함.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변함없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외교의 최고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이 인내심과 지혜를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성공했던 것 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함.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함께 소신껏 일해 꼭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임.
- 이에 보즈워스 대표는 "인내심과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이 옳다"며 "북한 움직임에 과잉 반응(overreact) 반응을 해서는 안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함. 김 전 대통령은 통화 말미에 "미국이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하면 북한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며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북한을 슬기롭게 잘 다뤄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함.

"한-미FTA 현 상태론 수용불가"<커크>(3/10)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9일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한·미FTA 처리를 위해 재협상이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함.
- 그는 부시 전 행정부가 한·미FTA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대통령은 이 협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고 나는 이에 동의한다"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용의가 있다"고 말함. 커크 지명자는 또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은 '협상 열병(Deal Fever)'에 걸려 있지 않다는 발언을 통해 새로운 협상보다는 기존의 협정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앞으로의 정책구상을 설명함.
- 그는 그러나 "한국이 모든 양자 무역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길 원한다"라며 한·미FTA의 성공적인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강조하기도 함. 커크 지명자는 또 "한·미FTA를 진전시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목표하는 바

들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와 관련한 '재검토 기준들(benchmarks)'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함.

- 커크 지명자는 한·미FTA 처리를 위한 미국의 입장이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를 통한 것인지 그리고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나온 창의적 해결 방식이 될지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음.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장관에 이어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는 USTR 대표 지명자도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한·미FTA 진전에 난관이 예상됨.
- 한편,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미FTA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미FTA가 공정한 경기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다른 제조용품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이 협정을 통해 바뀌지 않았다" 고 질의를 통해 지적함.
- 이에 커크 지명자는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이 이 나라의 노동자 가족들과 중소기업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촉매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믿고 있다"며 노동과 환경 기준 등 공정한 무역을 위한 규칙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가 적절한 시기에 제의를 해오면 무역협정처리를 위해 새로운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TPA)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커크 지명자는 전함.
- 그는 무역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많은 미국인들의 우려를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모든 미국인이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며 교역국들이 항상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 무역조정지원법(TAA) 추진 등을 통해 무역확대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 샤프 "키리졸브는 방어훈련..정치상황 무관"(3/9)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 한·미 간 연합연습인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훈련에 대해 "이 연습은 매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연례 연습으로,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이날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돌입하면서 "이 연습은 지휘관의 판단력을 높이고 양국 장병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며 조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사 측이 전함.
- 그는 "이 연습의 주요 목표는 연합사령부로 하여금 필요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연습의 취지에 대해 공식

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키 리졸브 훈련을 '북침 전쟁준비'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지수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라는 게 중론임.

- 이와 관련, 한미연합사는 "올해 연습에는 1만3천100여명의 증원전력이 참가하는 데 이는 예년의 참가규모와 거의 비슷하다"며 특히 "스위스와 스웨덴의 군 장교들로 구성된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이번 연습을 지켜보고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연합사는 "매년 실시되는 연례연습과 마찬가지로 유엔군사령부는 한·미 양국이 정례적인 방어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북한군 측에 통보했으며 또한 지난 6일 열린 장성급회담에서도 북한군 측에 '순수한 방어연습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함.

○ 한·미, 北미사일.북핵 정책 조율(3/9)

-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9일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과 연쇄 회동함.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이상희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유명환 외교통상장관, 현인택 통일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 대북정책 조율에 나섬. 특히 유명환 장관과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본부장과는 각각 회동과 오·만찬을 함께 하며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책과 북핵 6자회담 진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외교부 당국자는 "보즈워스 대표와의 회동은 주로 북한 미사일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대책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때 대응방안을 동시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보즈워스 대표는 위 본부장과의 회동에 앞서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보즈워스 대표는 앞서 오전 9시에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보고받는 등 이날 하루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뒤 10일 오전 귀국할 예정임.

○ 한·미 '키리졸브' 훈련 오늘 시작(3/9)

- 유사시 한국방어를 위해 미군 증원군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한·미 간 연례적인 연합연습인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이 9일 시작됨. 오는 20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예년 수준인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 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미군 2만6천여명이 참가함.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9만6천t급 '존 스테니스'호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훈련에 투입됨. 이번 훈련기간에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FE)도 실시되며 한

국군은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 등 2만여명 이상이 참가함.

- 우리 군은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연례적인 방어훈련일 뿐"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이번 훈련기간에 함대함 미사일이나 해안포 발사,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총격, 동·서해상으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전투기 위협,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모든 북측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우방궈 "한국 국회와 교류확대"(3/9)

-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9일 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와의 의회간 교류와 대화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그는 이날 발표한 상무위 보고서를 통해 "전인대와 외국 의회간의 정기적인 교류채널을 돈독히 함으로써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집트 의회와 유럽연합(EU) 의회 등과 각종 형식의 대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 실제로 2007년 7월 방중한 임채정 당시 국회의장은 우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회장 이윤성 국회부의장)'는 지난해 12월 서울을 방문한 전인대 위원들과 제3차 합동회의를 열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등 양국 의회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우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대만과 티베트 문제를 둘러싸고 다른 나라 의회에서 중국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전인대 외사위원회 성명 등을 통해 국가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사실상 경고함. 그는 이어 지난해 전인대는 쓰촨(四川)성 대지진 재해 복구,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성장 유지, 식품안전 등 민생문제에 주력해 왔다고 소개하고 "올해는 사회보험법과 사회구조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외교류 등을 통해 대표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 한일 외교장관, 北미사일.북핵 협의(3/12)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북핵 6자회담에 대해 협의함.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명환 장관이 오늘 아침 나카소네 외상과 전화통화를 가졌다"면서 "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대책 및 6자회담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유명환 장관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다음주 초 일본을 방문토록 했음을 설명했다"며 "양측은 이를 계기로 지난주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함. 나카소네 외상은 또 통화에서 11일 김현희 씨와 다구치 씨 가족 간 면담 실현에 대해 아소 다로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사의도 표명했다고 문 대변인은 전함.

○ 日 "김현희 면담, 한·일 미래지향 성과"(3/12)

- 일본 정부는 대한항공기 폭파범인 김현희(47)씨와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간의 면담 실현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의 성과"로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의 조기 재조사를 촉구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1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전날 부산에서 김현희씨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로 그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던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 가족간의 면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함.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전날 기자단에게 "협력해준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함.
- 재임 중 납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드디어 양국이 납치문제에서 같은 인식을 갖게 됐다"며 이번 면담 성사가 이명박 정부의 탄생 덕분이라는 점을 내세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김현희씨와 한국 정부에 거듭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나타냄. 가와무라 장관은 그러면서 "납치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약속했던 작년 8월의 북일 양국 합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함.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번 면담이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발족돼 노무현 전 정부의 대북 융화정책 노선을 전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북한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함. 요미우리는 한국은 수백명의 국민이 북한이 납치됐다는 점을 들어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소식과 안부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내부 정보도 일본보다는 풍부하기 때문에 한일 연대가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진전을 기대함.
- 그러나 이번 면담이 북한에 주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 "태도가 경직되면 됐지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함.
- 아사히(朝日)신문도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면담을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에 자극받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

지 우려가 크다면서 납치문제 재조사에 대한 북일 합의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그런 가운데 이번 면담에 이어 김씨의 일본 방문 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임. 일본 납치피해자 가족들은 납치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기 위해 김씨의 방일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아사히는 김씨의 방일 문제에 대해 김씨의 경우 사건의 실행범으로 사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입국관리법상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비자 발급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정치적 판단을 주목됨.

권철현, 한·일 공동방송 구상 제시(3/11)

- 권철현(權哲賢) 주일대사는 11일 "한·일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이 공동 방송국을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이날 낮 주일대사관과 마이니치(每日)신문사 공동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한·일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15년 이상 ARTE라는 공동 교양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권 대사는 "프랑스와 독일은 ARTE를 공동 운영하면서 국민간 문화적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유럽의 통합을 앞당기는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한국과 일본도 공동 방송국을 설립해 교양, 문화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한층 강화되고 아시아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이해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으로 향하는 길에서 한국과 일본의 앞서간 발자국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는 좋은 '안내의 발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한·일 양국의 위상은 A2(Asia 2)라는 용어로 상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함. 권 대사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이나 황사 공동 대응, 소말리아 해적 공동 대응 등을 A2의 역할의 사례들로 제시하면서 "A2의 개념은 한일 양국에 더해 중국을 포함하는 A3 차원까지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이와 함께 권 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도 실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며 "특히 취임 후 일본과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 1년간 총 57회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중 일본과의 회담이 가장 많은 6차례였다"고 소개함.
- 또 "한국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래 준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개혁 등 국가 체질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저탄소 녹색 성장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가 한국이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저는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더 큰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 아울러 권 대사는 한·일관계와 관련, "자국 국민이 소중하면 할수록 이웃 나라와 국민도 소중하다는 균형잡힌 사고를 갖춘 지도자들이 필요할 때"라며 "일본의 지도자들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해 노력한다는 자세에 입각해 이런 문제들을 다뤄 줄 것을 요망한다"고 덧붙임.

○ 한·일 EEZ경계회담..양측 주장 '평행선'(3/9)

- 한국과 일본은 9일 서울에서 제10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하고 양국간 해상 경계획정 방안을 협의했으나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이뤄 합의점을 찾지 못함. 황승현 조약국장과 쓰루오카 고지(鶴岡公二) 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독도와 일본 오키섬(沖島)의 중간선을, 일본 측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각각 양국 EEZ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또 일본 측은 양국의 입장 차이로 EEZ가 겹치는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 시행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잠정적인 해양과학조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EEZ 경계획정을 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하반기 중 일본 도쿄(東京)에서 만나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함.

라. 미·중 관계

○ "오바마, 北 미사일 위험성 경고"(3/1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북한 핵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미국의 외교안보 과제를 설명하면서 "북한 미사일 계획이 주는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계획의 위험성을 환기시킨 것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실험용 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사실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나온 첫 반응임.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게 제거하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6자회담에서의 중국 역할에 사의를 표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최근 남중국해상에서 발생한 미국 해양관측선과 중국 선박 사이의 대치사건과 관련,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양국간 군사대화의 격과 빈도를 높이길 기대한다는

뜻을 양 부장에게 밝혔다고 백악관측이 전함.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미국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상 선박대치의 경위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번 사건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각기 나라 안팎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시급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양 부장에게 제안함.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 문제에 언급, "인권증진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중국 정부와 티베트 달라이 라마 대표 간의 대화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양 부장은 오바마 대통령 예방에 앞서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남중국해 선박대치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中 "美하원의 티베트결의는 내정간섭"(3/12)

- 중국은 12일 미국 하원이 중국에 티베트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달라이 라마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킨 데 대해 이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에 위배되는 내정간섭이라고 강력 항의함.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 하원에서 통과된 '티베트 결의'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민족종교정책을 근거없이 비난하며 달라이 라마의 반중국 분열 활동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힘.
- 마 대변인은 이어 미 의회에 대해 즉각 착오를 바로잡고 중국의 내정간섭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측에 이와 관련해 교섭을 할 것을 요구함. 앞서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워싱턴발 기사에서 이번 티베트 결의는 지난 50년간 티베트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에서 이룩한 현저한 진보를 무시했다고 지적함.
- 통신은 이어 이번 결의는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되풀이하고 달라이 라마의 분리주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함.

오바마 "대화를 통한 北개방 노력 계속"(3/1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 "대화를 통한 북한 개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백악관에서 처음 직접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을 통해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반 총장-오바마 대통령 면담 자리에 동석했던 유엔 고위 관계자가 12일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바 있지만, 취임 후에는 경제 위기 및 외교적으로는 가자 전쟁, 이란·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의 우선순위에 밀려 북한 정책에 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는 거의 밝히지 않아옴. 특히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 반 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핵 해결에서 6자회담이 기여해 온 바를 설명하고, 대화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함. 또 반 총장은 최근 유엔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으며, 정무적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반 총장은 이날 미 상·하원 외교위 및 에너지·환경위 소속 의원 50여명과 잇따라 만나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이전에 미국이 기후변화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주문함.

클린턴 "中과 北미사일 반대 의견일치"(3/1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돼 있으며, 발사 저지를 위한 설득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는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방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함.
- 그러나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든 간에 실제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다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다양한 (대응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함.
- 클린턴 장관은 현재 6자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미사일 협상도 대북 대화의 의제로 삼고 싶다고 말함. 클린턴 장관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최상의 목표로 남아 있고,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이 반드시 재개돼야 하며, 우리는 현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측에 "협상을 재개하고 협력하려는 용의가 있다는 '증거'를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함.
-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경우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의무사항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라는 점과 그들이 이런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 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는 북한이 장래에 발사를 하든 않든 관계없

이 우리가 해나갈 일"이라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또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중·일 방문 기간에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초청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 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함.

- 한편, 클린턴 장관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들이 미 해군 관측선을 위협한 사건과 관련, 미·중 양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양측 선박 간 충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설명함. 그는 또 미·중 양국은 오는 4월 초 런던에서 열리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에서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협조해나가기로 다짐했다고 덧붙임.
- 이와 함께 클린턴 장관은 방중 기간에 인권문제가 소홀히 다뤄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미.중 양국관계에서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다만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원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음을 시사함. 양 외교부장은 이날 클린턴 장관을 만난 직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회담했으며 12일에는 백악관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임.

○ 中상무부장 "美 도하협상 합의 준수 기대"(3/11)

- 중국은 미국이 전임 행정부 때 도하라운드 협상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길 바란다고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10일 밝힘. 천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 회견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미국이 전임 행정부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말함. 그는 "미국이 (이미 타결된 내용을) 재고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백악관은 지난주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도하 협상에서 다른 나라들이 시장개방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한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점을 밝힘. 이와 관련해 천 부장은 미국과 주요 개도국간에 여전히 주요 장벽으로 남아있는 농업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권)를 언급하면서 미국과 개도권간에 이 문제가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그는 중국이 보호주의 무역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밝힘.

○ "中 핵군사력 대폭 강화돼"<美정보당국>(3/11)

- 중국의 핵 군사력이 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배치로 대폭 강화됐다는 분석이 미 국방부 정보책임자에 의해 제기됨. 마이클 메이플스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핵 군사력이 이동식 ICBM인 DF-31과 DF-31A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JL-2의

배치로 점점 더 생존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 그는 "중국은 또 우주 역량과 우주공격 대응 능력, 사이버와 전자전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함.

- 메이플스 국장은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상에서 최근 미 측량선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국은 주변 지역에 대한 군사적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첨단무기시스템 개발해 배치해 지역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독트린을 시험하고 있다"고 중국의 군사력 현황을 설명.
- 그는 또 "중국 해군은 현대적인 잠수함을 거느린 대규모 해상함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군은 사거리를 늘린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
- 이와 함께 데니스 블레어 미 정보국(NI) 국장은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획득하기가 어려워 현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르면 2010년 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다고 분석함. 그는 또 이란이 기술적으로 2010~2015년 사이에 고농축 우라늄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함. 하지만, 블레어 국장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 블레어 국장은 "이란 지도자들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핵무기와 이란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목표와의 연계, 이란이 80년대부터 2003년까지 핵무기 개발을 위해 기울인 막대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이란이 현재도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대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함.

"中 관측선 위협 매우 중대"<블레어>(3/11)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10일 중국이 더욱더 군사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의 미국 관측선 위협을 2001년 미 첩보기의 피랍과 승무원 억류조치 이후 최악의 분쟁이며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우려를 표시. 그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의 정책이 "점점 더 군사적으로 공세적 태도를 견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밝힘.
- 블레어 국장은 이어 중국이 군사력을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 미국 첩보기 사건은 2001년 4월 하이난섬 부근에서 미 첩보기가 중국 공군기와 충돌해 중국 조종사 1명이 숨진 사건으로 당시 미 첩보기는 중국군에 의해 강제착륙됐으며 억류됐던 승무원들은 10일 후에 풀려났고 비행기도 나중에 반환됨.

中 "美해군 관측선 국제법 위반"(3/10)

- 중국 선박 5척이 지난 8일 남중국해를 지나던 미국의 비무장관측선에 접근해 위협을 가한 사건과 관련, 중국은 미국 선박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함. 중국 외교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해군 선박이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미 국방부가 중국 선박들이 해양관측선에 근접해 위협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중국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함.
- 지난 9일 미 국방부는 전날 중국 해군 정보함 1척을 포함한 선박 5척이 남중국해에서 해양관측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해군 소속 'USNS Impeccable(임페커블)'호에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다며 중국에 항의의 뜻을 밝힘.

美 제독 "中 항모 보유 움직임 주시"(3/10)

-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나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베트남을 방문 중인 로버트 윌라드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9일 말함. 윌라드 사령관은 중국이 항공모함 보유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함. 그는 항공모함 보유는 "엄청난 자원과 시간, 노력을 요구하는 매우 벅찬 일"이라고 강조. 중국 해군 부참모장 장더순(張德順) 소장은 이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함대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항공모함 보유를 계획하고 있음을 비침. 그는 "(중국) 해군이 언젠가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게 돼도 국방 전략은 순수한 방위 전략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달라이 라마 "티베트에 자치권을"(3/10)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73)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할 티베트 봉기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티베트의 자치권 회복'을 역설함. 9일 공개된 기념사 초안에서 달라이 라마는 "우리 티베트인들은 법률로 보장된, 의미있는 자치권을 원한다"고 밝힘. 달라이 라마는 이어 중국의 티베트 점령 이후 티베트인들이 겪은 고통을 언급하면서 "티베트인들은 문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해야 했다"고 회상함. 그는 이 대목에서 지난해 3월 티베트(시짱·西藏) 자치구 라싸(拉薩)에서 발생한 시위를 과잉진압해 대규모 유혈 사태를 일으킨 중국군의 대응을 비난하기도 함. 달라이 라마는 그러나 "오래전부터 티베트인들과 중국인들은 이웃이었다"면서 양측이 힘을 합쳐 티베트 문제의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함.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봉기 50주년 기념일인 10일 망명지인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州) 다람살사의 사원 앞마당에서 기념 연설을 할 예정임.
- 달라이 라마가 머무는 사원 인근에는 티베트 국기와 달라이 라마 사진, "티베트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담은 포스터가 빽빽이 걸려

티베트 봉기 5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함.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1만명이 넘는 티베트인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통 경계에 돌입함.

- 한편, 미국 하원은 이날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에 대한 억압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함.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러시 홀트(뉴저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와 협력해 티베트 사태를 해결할 '영구적인 해법'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결의안은 이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활기 넘치는 민주적 공동체를 창조해 냄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티베트 이들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에 대한 억압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결의안은 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 정부 인사들을 받아들인 인도 정부의 '관대함'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이고, 실용적인 다양한 해법들'을 사용해 중국인들이 티베트인들의 정체성 및 인권을 존중하도록 도울 것을 제언함.

美 "中선박 5척, 美관측선 위협"(3/10)

- 미국 국방부는 9일 중국 선박들이 미국의 해양관측선에 근접해 위협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지적하고, 중국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함. 스트워트 업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정보함 1척을 포함한 선박 5척이 전날 남중국해에서 해양관측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USNS Impeccable(임페커블)'에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힘.
- 업튼 대변인은 비무장 상태인 관측선에는 민간인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중국 선박의 아마추어적인 행동은 공해의 합법적인 사용자에 대한 안전과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 국제법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업튼 대변인은 또 "우리는 중국 선박이 책임있게 행동하고, 해상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도발적인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미 국방부는 중국주재 대사관 국방무관을 통해 중국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미 해양관측선은 중국 선박이 근접항해를 하자 호스로 물을 뿌리며 떨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측 선원들은 속옷만 남긴 채 옷을 벗고 관측선의 7m 이내까지 접근했다고 AP통신은 전함. 이번 사건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결정 강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 군사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이어서 양국 군사관계 복원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오바마, 연내 中 방문 가능성"<홍콩지>(3/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내에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홍콩의 문회보(文匯報)가 9일 보도함. 문회보는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말을 인용해 후진타오 주석이 이미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금년 중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전국정치협상위원회(정협) 위원인 저우원중(周文重) 주미 중국대사는 오바마 정부가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이 이들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마. 미·일 관계

○ **"새 美日 공동안보선언 마련해야"(3/10)**

- 2010년도 미·일 동맹 50주년을 맞아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공동안보선언을 마련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제안함. CNAS는 10일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 오바마 행정부를 위한 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82쪽짜리 보고서에서 "미·일 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여를 위한 근간"이라며 새로운 공동안보선언은 동맹 사이의 알력을 줄이고 다양한 기대치들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는 내년 미·일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안보협력에 있어 미래지향적 관계를 규정한 1996년 미·일 공동 안보선언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언을 준비할 것을 제안함. 1996년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도쿄에서 양국 간 안보 협정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안보선언에 서명함.
- 보고서는 또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기지를 2014년까지 괌으로 이전한다는 양국 간 약속을 일본이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며 "신뢰는 동맹의 접착제와 같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동맹 관계의 기초에 금이 갈 것"이라고 지적.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정부에는 일본에 대한 안보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이른 시일 내에 최신형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일본에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F-22A를 동맹국에 판매하기로 한다면 일본이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현재 F-22A 전투기의 해외 수출은 미국에서 법률로 금지돼 있음.
- 또한 보고서는 "일본은 에너지보존 등 '녹색' 테크놀로지와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선진적인 능력을 지녔다"며 "일본은 지역안보에 더욱 이바지하기 위해 이런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함. 그러면서 일본이 개발원조, 인도주의적 지원, 재해 예방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함.

- 일본과 미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함. 보고서는 "우리는 양국 간 동맹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모든 조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양국에 미·일 FTA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한다"며 "협정은 겉치레가 아닌 실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다른 FTA들을 위한 준거 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
- CNAS의 공동소장이었던 미셸 플라워노이는 최근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에 취임했고, 또 다른 공동소장인 커트 캠벨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기용될 것으로 전망돼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일본 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임.

바. 미·러 관계

○ 메드베데프-오바마, 4월1일 회동(3/11)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오는 4월 1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핵무기 비확산 문제 등을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4월 2일 열리는 제2차 주요 20개국(G20) 금융경제정상회의에 참석 차 런던을 방문하는 양국 정상은 정상회의 하루 전날 별도 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이번 만남은 지난 1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양국 지도자 간 회동으로 부시 전 행정부 당시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전 미국 상원 의원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모든 기회를 얻었다"면서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신호들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함. 그는 "무기 감축, 경제문제, 테러 척결 등 많은 국제 현안들이 양국 관계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임.
- 부시 정권에서 동유럽 MD,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 그루지야 전쟁 등으로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를 보였던 양국은 최근 비난을 자제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앞다퉈 표명하고 있음.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제네바에서 첫 외무장관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에 재설정(Reset) 작업이 시작됐음을 알리기도 했음.

○ "미, 러와 민간 핵협정 부활 추진"<WSJ>(3/9)

-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민간 핵협정 체결을 재추진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 9일 보도함. 이 신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러 관계 재설정'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민간 핵협정 부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지난해 5월 러시아와 민간 핵협정을 체결했으나, 3개월 뒤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핵협정 체결을 철회한 바 있음. 미국 정부의 미-러 핵협정 체결 재추진 움직임은 그루지야 전쟁 이후 단절됐던 러시아와의 대화 재개를 천명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함.
-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오는 4월 초 정상회의 이후 러시아와 고위급 대화를 "공식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당시 이러한 결정이 주요 전략 문제들에 관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백악관 관리들은 그러나 정부가 아직 미-러 핵협정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밝힘.

사. 중·일 관계

◎ 中-日, 이달말 정상회담-안보대화 개최(3/12)

- 중국과 일본이 이달 말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도쿄에서는 안보대화를 재개하는 등 대화 외교에 들어감.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12일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일본이 이달 말 도쿄에서 안보대화를 재개한다고 보도함.
- 중일 안보대화는 1993년부터 매년 열려왔지만 지난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이후 2년동안 중단됨. 이 당국자는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간부들이 안보와 국방정책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면서 "중국은 부장조리를 보낼 것"이라고 말함. 이와 관련,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11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간부들이 안보대화를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함.
- 일본은 재개되는 안보 대화에서 항공모함 건조 등 중국의 군사력 확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짐.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이달 하순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갖음.
- 중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북한 인공위성 발사,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임.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과 함께 안보대화를 갖는 것은 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함.

◎ 中 징용피해자들 日 항소심서도 패소(3/10)

-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역을 당했다며 일본 정부와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중국인들이 일본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함. 이미 사망한 3명을 포함, 45명의 중국인들로 구성된 원고측

은 일본 정부와 미쓰이(三井)광산,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수 만명의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강제 이주돼 후쿠오카현 남부 탄광에서 석탄 채굴에 동원됐다며 모두 10억3천500만엔(16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그러나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배상 만료 시효인 20년이 이미 경과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음. 후쿠오카 고법은 또 1972년 중-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체결된 양국 공동 선언에 따라 중국인들은 개별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에 앞서 2007년 일본 대법원도 1972년 선언에 따라 중국인들은 전쟁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음. 그러나 일본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강제 노역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항소심 재판장이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일본 정부와 업체들은 이를 거부함.

아. 중·러 관계

○ 中·러, "한반도 주변국들, 자제력 보여야"(3/11)

-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1일 밝힘. 외무부는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한 직후 보도자료를 발표해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함.
- 외무부는 또 "두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 자제력과 평정심을 발휘해야 하며,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자. 기타

○ 日, 소말리아 해적퇴치 호위함 내일 출항(3/13)

-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13일 오전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 승인을 거쳐 소말리아 해적 대책으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을 파견하기 위해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함.
-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또 해적 퇴치 등을 위해 자위대를 항상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적대책법안'도 승인함.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상자위대의 활동 근거를 해상경비행동에서 이 법으로 전환할 방침임.
-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됨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14일 히로시마(廣島)현에 있는 '사자나미', '사미다레' 등 호위함 2척을 소말리아로 출발시킬 계획임. 이들 호위함은 2주일 뒤에 소말리아 해상에 도착해 일본 선박 등에 대한 경호 활동에 들어감.
- 해상경비행동에 따라 자위대는 일본 선박과 일본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등 일본 관련 선박을 보호하며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의

경우엔 해적에 대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됨. 반면 새 해적대책법안은 호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외국 선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음.

-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각료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해상경비행동 발령의 의미를 설명함. 그는 이어 "해적대책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해상경비행동 발령에 따라 자위대원 등이 휴대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힘.
- 이는 자위관이 무기를 휴대한 채 외국에 입항할 경우 무기수출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기수출 3원칙 예외는 이라크 지원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라크에 파견됐던 자위대원들에게도 적용됨.
-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佐藤) 내각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 등 3개 항에 해당되는 국가에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후 1976년 미키(三木) 내각에서 이 원칙을 확대,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막내린 中 兩會…경제·민생문제에 집중(3/13)

- 중국 최고의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에 이어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3일 각종 경제살리기와 민생 문제를 집중 논의한 뒤 막을 내림. 올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초점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대책과 그에 따른 민생문제, 티베트 봉기 50주년(3월10일)과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20주년(6월4일) 등을 맞는 사회 안정에 맞춰짐.

◇ 경제 민생에 집중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기 위해 9천500억위안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 중앙정부의 1조1천800억위안의 예산 편성, 국내수요 확대를 위한 감세, 취업확대 방안 등을 내놓았던 것이 가장 눈에 띔.

- 이번에 제출돼 폐막식에서 통과된 정부업무보고,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중앙과 지방예산,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도 경제문제와 민생 사회안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짐.
-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전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22.1% 증가한 7조6천235억위안(1천738조원)으로 책정됐으며 9천500억위안 규모의 적자예산이 편성됨. 아울러 회기에 제출된 의안 518건 중 61%는 경제법이나 행정법, 사회법으로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문제에 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됨.

- 12일 폐막한 전국정협에서도 위원들은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비롯해 정치, 경제, 법률,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사회보장 등 분야별 대책과 건의안 5천571건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중 절반이 경제 문제에 집중됨.
-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식품안전법안을 통과시켜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보험법, 형법수정안 등 각종 민생 사회법안이 심의됐으며 회기 폐막 이후에도 상무위원회가 심의를 계속할 예정임.

◇ 추가 경기부양책 존재 논란 = 이번 양회에서는 전 세계 증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관심이 쏠렸던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의 존재를 놓고 논란이 빚어짐.

- 원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던 8조~10조위안의 추가부양책은 나오지 않음. 개막식 이후 이같은 예측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전국정협 위원인 리더수이(李德水) 전 국가통계국장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빼하고 나선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핑(張平) 주임도 "향후 경제상황 추이에 따라 경기부양책이 필요한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단기간내에 추가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이처럼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면서도 원 총리가 폐막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는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음. 논란이 확산되자 급기야는 원 총리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섬.
- 그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전체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번 기회에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문을 연 뒤 "중앙정부가 투입하는 1조1천800억위안과 세금 감면 5천억~6천억위안, 기업 퇴직보험금 기준과 1천200만 교사들의 임금 인상, 농민 수입 증대, 향후 3년간 8천500억위안을 투입해 의료위생체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모두 4조위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이라고 정리함.
- 결과적으로는 당초 기대했던 추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대보다는 작은 규모의 새로운 부양책은 포함돼 있었던 셈이어서 어느 누가 100%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음.

◇ 부정부패 척결 = 이번 전인대에서 지난 한해 공무원들이 받아챙긴 뇌물 액수가 21억위안(4천654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통계가 발표되는 등 부정부패 문제의 척결도 비중있게 논의됨.

- 이날 통과된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서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 문제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돼 부패 척결이 시급한 문제임이 다시 한번 부각됨. 실제로

지난해 문책을 받은 지린(吉林)성 인대 상무위원회 미펑쥔(米鳳軍) 전 부주임과 충칭(重慶) 기획국 장융(蔣勇) 전 부국장을 비롯한 7명이 자격이 박탈돼 퇴출됨. 또 중국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 아러타이(阿勒泰)지구에서 시범 실시 중인 공직자 재산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 달라진 양회 = 올해 양회는 두 기구가 힘없는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달리 국정을 준엄하게 비판하고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놓고 격렬한 설전을 벌이는 의정 토론장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음.

- 거젠슝(葛劍雄) 전국정협 위원은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를 앞에 놓고 교육기관들의 부정부패를 직접화법으로 폭로하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해 관심을 끌음. 이번 양회는 경제위기 여파로 회기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고 대표단의 숙소를 4성급 이하로 낮추고 하루 식사비를 제한하는 등 초절약 모드로 진행됐으며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를 반영해 네티즌과 대표단과의 온라인 대화가 처음으로 도입됨.
- 티베트(시짱·西藏) 라싸(拉薩)에서의 유혈시위 사태로 얼룩졌던 지난해 양회와는 달리 티베트 봉기 50주년(3월 10일)을 맞은 올해는 티베트 지역에 철통같은 보안을 강화한 탓인지 특별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은 채 마무리됨.
- 아울러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기자들이 정치개혁을 요구하거나 중국 경제 성장률 8% 목표 달성을 비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등의 등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도 현장에서 보여준 작지만 큰 변화로 손꼽힘.

한-아세안센터 창립..사무총장에 조영재(3/13)

-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무역증대와 투자촉진, 관광활성화, 문화교류 등을 지원할 일종의 역내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가 13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행사를 갖고 공식 출범함. 이날 행사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카싯 피롬 태국 외교장관 등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유 장관의 환영사, 동영상 상영, 한승수 총리 축사, 외빈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됨.
- 한 총리는 축사에서 "한-아세안 센터는 교역증대 및 투자촉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인적교류 증진, 관광 활성화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국제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주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유 장관은 앞서 환영사에서 "올해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늘 한-아세안센터의 창

립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한-아세안센터가 양측 협력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한-아세안센터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일종의 대사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11개국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됨.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 1명씩,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는 사무국의 감독 및 자문기관이며 사무국은 센터의 사업을 기획하고 이행하는 조직으로 서울에 위치함.
- 한국과 아세안 각국 정부 대표 1인으로 구성된 11명의 이사들은 이날 첫 번째 이사회를 열고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등 센터발족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 승인했으며 조영재 외교부 본부대사를 임기 3년(중임 가능)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함.

프랑스 나토 복귀 공식 선언(3/12)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프랑스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통합군 복귀를 공식 선언함.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에콜 밀리테르(프랑스 국방대학)에서 열린 프랑스의 국방전략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현재의 (나토 탈퇴)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면서 복귀를 공식화함.
- 43년 만의 복귀 = 프랑스가 나토에 복귀한 것은 1966년 샤를 드골 전(前) 대통령 당시 미국의 나토 주도에 반발해 탈퇴를 결정한 지 43년 만임. 프랑스는 냉전 시절인 1949년 소련의 안보 위협에서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집단 방위체제인 나토의 창립 멤버였으나 드골 전 대통령이 1966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국방노선을 추구하면서 탈퇴했었음. 하지만 프랑스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나토 사령부에 100여명의 군인을 파견하고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 나토군의 일원으로 자국 병력 2천여 명을 파견해왔다.
- "독자 핵 억지력 유지" =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가 나토에 복귀하는 것은 프랑스는 물론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지금까지의 오랜 기간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프랑스는 더 강해지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어 "프랑스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종속되기 보다는 지도자 국가의 반열에 서야 한다"라면서 "우리가 그 곳에서 이뤄지는 결정과 기준을 듣기 위해 기다리기 보다는 그 곳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라고 복귀의 당위성을 설명함.
- 또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나토 복귀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미 종속을 우려하는 좌파의 비판을 공개 반박함. 프랑스는 나토 복귀를 계기로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나토군 지역통합사령부와 미국의 버지니아주 노퍽에 소재한 통합군사

령부를 이끌어 나가기로 미국정부와 이미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함.

- 이에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프랑스의 나토 복귀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21세기 국방전략을 담은 국방백서를 공개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나토에 복귀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복귀를 기정사실화했음.
- 내주 의회 표결..야당은 비판 = 프랑스 의회는 오는 17일 정부의 외교정책을 토의한 뒤 나토복귀 결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집권 우파인 대중운동연합(UMP) 측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제1 야당인 사회당의 마르틴 오브리 대표는 "프랑스의 나토 통합군 복귀를 정당화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렇게 서두를 일도 아니고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사르코지 대통령의 친미주의 성향과 정책을 비판함
- 중도파 민주운동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도 이날 유럽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나토에 얽매이지 않고) 누려온 일정한 독립과 자유가 종말을 고했다고 비난하고 향후 외교정책의 대미 종속 가능성을 우려함
- 야당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나토 통합군 복귀를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간 파리마치 최근호가 공개한 이폽(Ifop) 설문결과 응답자의 58%가 복귀에 찬성했으며 르누벨옵세르바퇴르가 LH2에 의뢰한 설문에서는 52%가 정부의 복귀 결정을 지지함
- 나토 '환영' =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사르코지 대통령의 선언 후 발표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프랑스 대통령의 선택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반김. 스헤페르 사무총장은 "이제 프랑스의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은 (다음주 표결을 앞둔)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면서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의 나토 복귀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힘

티베트 '불안속 평온'…中, 시위 원천봉쇄(3/11)

- 티베트(시짱·西藏) 봉기 50주년 기념일인 10일 지구촌 곳곳에서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지만 정작 수도 라싸(拉薩)를 비롯한 티베트와 인근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에서는 '불안한 평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짐. 신화통신에 따르면 라싸는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으며 티베트 일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음.
- 이는 라싸에만 엄청난 수의 무장병력이 증파돼 철통같은 경계경비를 펴고 있고, 티베트 접경지대에서도 증강된 군경이 삼엄한 검문검색으로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여전히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티베트에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의회에

이어 중국에 티베트 인권 개선을 위해 달라이 라마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 티베트 현지 표정 = 신화에 따르면 티베트력으로 정월 15일인 10일 아침 라싸 시내는 평상시와 다름 없이 출근하는 인파로 붐볐으며 일부 학부형들이 출근길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등 평온했다고 신화는 말함. 그러나 라싸 시내는 이날 자동 소총을 휴대한 무장경찰들이 순시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고 티베트와 인근 접경 지대의 티베트인 마을들은 군경이 득시글거렸으며 검문소에서 보안검색이 강화돼 시위를 원천봉쇄했다고 AP는 전함. 티베트 제3의 도시인 쩌당(澤當)의 한 호텔 직원은 "겉으로 평온해 보였지만 보안이 매우 삼엄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방 소식통들은 "티베트인, 특히 승려들은 저항의식이 상당히 강해 철통 보안 속에서도 시위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함.

◇ 美, 티베트 문제 언급 = 백악관은 10일 티베트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 당국과 달라이 라마간의 '실질적인'인 대화를 촉구함.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하원이 내놓은 티베트의 자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함. 펠로시 의장은 망명 티베트인 및 티베트 자유 지지자들을 상대로 행한 의회 연설에서 "의회는 티베트 봉기 기념일인 10일 이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말함.

◇ 지구촌 곳곳서 지지시위 =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는 10일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열림. 2천여명의 망명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기념 연설이 끝나자 '중국은 가라', '티베트는 티베트인의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 인도 수도 뉴델리, 수천명의 망명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도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들이 벌어짐. 이밖에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 폴란드 바르샤바, 호주 캔버라, 캐나다 등지에서도 수십-수백명의 시위대가 거리행진 등을 벌이며 중국과 달라이 라마간 대화와 중국의 티베트 정책 개선 등을 촉구. 앞서 미국에 망명한 티베트인 수백명이 둔 9일 오후(티베트 시간 10일 0시) 워싱턴 백악관 부근에서 '자유 티베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수백 명이 중국 영사관 앞에서 '달라이 라마 만세' 등을 외치며 중국의 티베트 통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임.

◇ 티베트 취재 봉쇄 = 중국 당국이 티베트 관련 상황을 취재하던 외신기자 10여명을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등 탄압에 나섰다고 조너선 와츠 중국외신기자클럽(FCCC) 회장이 10일 말함. 와츠 회장은 지난주 쓰촨(四川),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내 티베트 영토에서 언론 보도를 내보냈던 외국 언론 기관 중 6곳 이상의 취재단이

구금되거나 추방됐으며, 장비를 압수당하기도 했다고 말함. 중국 공안은 이날 칭하이의 티베트 사원을 방문하려던 AFP통신 기자 3명을 쫓아내기도 함.

"中, 빠르면 올해 경제대국 2위 부상"(3/11)

- 중국이 빠르면 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영국 노팅엄대학 중국정책연구소가 전망함. 중국 차이나 데일리는 10일 야오수제(姚樹潔) 노팅엄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나 내년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함.
- 야오 교수는 2년 전 중국 경제가 2018년은 돼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음.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이미 지난해에 일본을 따라잡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
- 야오 교수는 "중국과 일본의 2007년 GDP와 2008년 증가율에 관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로 추산하면 지난해 중국과 일본의 GDP는 각각 4조4천200억달러와 4조6천800억달러"라고 말함. 그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은 오는 2011년이나 2012년까지 지난 2007년에 기록한 생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지만 중국은 올해 7-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중국이 올해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함. 이에 대해 판젠핑(范劍平) 국가정보센터 수석 경제학자 겸 경제예측부 주임은 "GDP로 국가별 순위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함. 판 주임은 "중국은 1인당 GDP가 엄청 낮다"면서 "나는 1인당 GDP가 개발도상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日국책硏, 아시아 공동통화 제언(3/10)

- 일본 방위성 산하기관인 세계평화연구소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악화에 따른 대책으로 2030년대 이후에 아시아 공동통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함. 10일 이 단체가 마련한 '2030년대 국제경제·금융체제 전망' 보고서는 아시아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달러나 유로화에 버금가는 아시아 공동 통화를 도입, 아시아 지역이 협력해 세계경제 안정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를 위해 2010년대에 일본과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공동통화를 도입하는 데 대해 합의하고 2020년대에는 무역 자유화와 경제 연대를 강화해 아시아 통화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통화 단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당면대책으로 2010년대 전반을 불량채권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본 투입 및 불량자산 매입, 국제적인 금융감독 체제 정비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보고서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해 "미국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재고돼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함. 이어 보고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장 감시 기능 및 경제 위기에 대한 지원 체제를 지역 단위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아울러 보고서는 아시아 공동통화 구상에 대한 미국과 유럽 등의 반발을 고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존재는 중요한 만큼 유로화와 함께 달러 기축 체제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적시함.

사공일, G20 런던회의 협의차 방일(3/10)

- 대통령 직속 G20 조정위원회의 사공일 위원장은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릴 G20 금융정상회의 협의차 10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위원회측이 밝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하는 사공 위원장은 11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를 예방해 "G20 런던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구체적 결과에 합의해 세계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예정임.
- 사공 위원장은 또 방일기간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 등과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공조, 보호무역 저지, 금융체제 개선 등 G20 런던회의의 의제에 대해 협의하고 한일 양국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임. 사공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15일 같은 목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와 미국을 방문한 바 있음.

日, 우크라서 3천만t 온실가스배출권 구입(3/9)

-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서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약 3천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9일 보도함. 일본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은 처음으로, 취득액은 약 3백억엔(4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일본은 교토의정서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에 비해 평균 6%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6%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해외에서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5년동안 약 1억t에 달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30% 정도를 한꺼번에 구입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밝힘.
- 온실가스 배출권 시세는 세계적인 경기 후퇴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6개월 전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급락한 상태임.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 붕괴 후 경기 침체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

매각 가능한 배출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태국 외교장관 13~14일 방한(3/9)

- 카싯 피롬 태국 외교장관이 13~14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다고 외교부가 9일 밝힘. 카싯 장관은 방한기간 유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6월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다음달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의할 예정임. 카싯 장관은 또 한승수 총리를 예방하고 13일 열리는 한·아세안센터 창립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임.

[참고 1] 〈티베트 봉기 50년 주요 일지〉 (연합뉴스, 3/9)

▲ 1949년 10월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 1950년 10월 = 중국 인민해방군 티베트 진주, 티베트 강제합병.

▲ 1959년 3월 = 티베트 곳곳에서 독립을 요구하며 중국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폭동 발생. 진압군에 의해 수천명 희생됨. 티베트 최고지도자 달라이 라마 인도로 망명.

▲ 1965년 = 중국 정부, 옛 티베트 땅 절반 가량을 '티베트자치구'로 지정하고 나머지 땅은 기존 각 성(省)에 통합.

▲ 1966년 = 중국 문화대혁명 발생, 티베트 불교사원 다수 파괴됨.

▲ 1989년 3월 = 대규모 티베트 독립 시위 발생, 계엄령 선포됨. 중국 정부군 시위대 유혈 진압.

▲ 1996년 6월 = 달라이 라마, 선거 절차를 통해 구성된 새 망명정부 수반으로 취임.

▲ 1999년 3월 = 중국,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독립 요구를 포기하고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놓을 경우 그와의 대화 통로는 열려 있다고 발표.

▲ 1999년 12월 = 달라이 라마, 티베트는 자치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중국이 (티베트에서) 문화적 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

▲ 2006년 7월 = 베이징(北京)과 티베트 수도 라싸(拉薩)를 연결하는 철도 개통.

▲ 2008년 3월10일 = 1959년 봉기일 49주년 기념일, 소규모 시위 발생.

▲ 2008년 3월14일 = 라싸에서 대규모 시위 발생. 달라이 라마, 중국 정부에 티베트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중단하도록 촉구.

▲ 2008년 3월15일 = 중국, 티베트 시위로 최소 10명 사망 확인. 공안 당국, 시위대에 17일 자정까지 투항하도록 통보.

▲ 2008년 3월16일 = 티베트 망명정부, 무력 진압과정에서 사망이 확인된 규모가 30명에 이르며 최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 중국 정부는 티베트 질서 회복을 위한 '인민전쟁' 선언.

▲ 2008년 3월17일 = 중국 정부, 라싸에 치안병력 증파하는 한편 검문검색 강화. 티베트 망명정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백명이라고 주장. 티베트 정부 외신기자 추방.

▲ 2008년 3월18일 = 중국 정부,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시위 배후 조종세력이라고 비난. 독립 포기할 경우 그와의 대화 통로는 열려 있다는 입장 재차 확인.

▲ 2008년 5월4일 = 중국 정부, 선전서 달라이 라마 특사와 3.14 시위 발

생 후 첫 협상.

▲ 2008년 7월1~2일 = 중국과 달라이 라마 특사 베이징서 2번째 협상.

▲ 2008년 11월5일 = 중국 달라이 라마 특사 3차협상 마무리, 협상서 이견차 좁히지 못함.

▲ 2008년 11월22일 = 달라이 라마 특별회의 주재 중도노선 유지에 합의.

▲ 2008년 12월6일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폴란드서 달라이 라마와 회동.

▲ 2009년 3월1일 = 티베트 승려 50여명 쓰촨(四川)성 티베트인 거주지서 종교자유 요구 시위.

▲ 2009년 3월2일 = 중국 정부 티베트 백서 발간, 농노해방 강조.

▲ 2009년 3월8일 = 티베트 긴장 고조, 신화통신 "티베트 보안조치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논평 게재.

jsa@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03/09/0603000000AKR20090309084800083.HTML